

연구보고서(수시) 2021-05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이영숙
하슬앞·고속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하솔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수시) 2021-05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발행일 2021년 5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787-0 93330

발|간|사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동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국가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2020년 0.84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향후 경제 활동인구의 감소와 미래세대의 사회적 부양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1년 제4차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근 20년 가까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출산과 보육·교육 등에 주요한 복지제도가 도입되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교체되며 가족과 아동양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여기에 저성장과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등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며 출산율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착목하여 아동 출산 및 양육의 현실적 제약이 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직접적 현금급여인 아동수당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아동부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모쪼록 동 보고서가 아동부문의 복지 향상과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경제여건 변화의 아동양육 영향	23
제1절 연구방법	23
제2절 연구결과	34
제3장 주요국 제도운영 사례	89
제1절 개관	89
제2절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101
제4장 종합 및 정책 시사점	107
제1절 종합	107
제2절 정책 시사점	112
참고문헌	115

표 목차

〈표 2-1〉 한국복지패널의 이전소득 구분	32
〈표 2-2〉 가구집단별 가구수 현황: 아동양육 여부 기준, 2015~2019년	36
〈표 2-3〉 아동가구의 집단별 아동수 분포: 2015~2019년	37
〈표 2-4〉 아동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구수 분포: 1~4분위, 2015~2019년	38
〈표 2-5〉 2세대 아동가구의 가구수 분포: 2아동 vs. 다자녀, 2015~2019년	39
〈표 2-6〉 가구 집단별 월평균 소비지출금액 추이(1): 2015~2019년	40
〈표 2-7〉 가구 집단별 월평균 소비지출금액 추이(2): 2015~2019년	41
〈표 2-8〉 가구집단별·소비품목별 소비증가율 비교(2016년): G1vs.G2vs.G4	55
〈표 2-9〉 가구집단별·소비품목별 소비증가율 비교(2019년): G1vs.G2vs.G4	57
〈표 2-10〉 한국복지패널의 가구 현황: 2015~2018년	59
〈표 2-11〉 한국복지패널의 가구 현황: 2015~2018년, 한부모·장애 가구	61
〈표 2-12〉 복지패널의 평균소득 분포및추이: 가구유형별·소득유형별, 2015~2018년	69
〈표 2-13〉 복지패널의 중위소득 추이: 소득유형별, 2015~2018년	71
〈표 2-14〉 복지패널가구의 빈곤율 추이: 가구유형별·소득유형별, 2015~2018년	73
〈표 2-15〉 한부모 가구 및 빈곤가구 추이: 2015~2018년	75
〈표 2-16〉 가구 현황 추이: 2015~2018년	76
〈표 2-17〉 아동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상세 수혜 현황: 2015년기준, 소득분위별, 연평균 ..	78
〈표 2-18〉 아동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상세 수혜 현황: 2016년기준, 소득분위별, 연평균 ..	80
〈표 2-19〉 아동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상세 수혜 현황: 2017년기준, 소득분위별, 연평균 ..	82
〈표 2-20〉 아동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상세 수혜 현황: 2018년기준, 소득분위별, 연평균 ..	84
〈표 2-21〉 아동가구의 빈곤 현황 및 공적이전소득별 빈곤완화 효과: 2015~2018년	86
〈표 3-1〉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도입 연도	101
〈표 3-2〉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대상 연령	102
〈표 3-3〉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적용 방식	103
〈표 3-4〉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외 관련 제도	104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합계출산율 추이: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14
[그림 1-2] 가족실태조사: 자녀 양육시 느끼는 어려움	15
[그림 2-1]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2008~2020년	24
[그림 2-2] 가구 집단별 소비지출 현황: 2015~2019년	40
[그림 2-3] 아동가구 집단별 소비지출 현황: 2015~2019년	41
[그림 2-4] 아동가구 소비지출액의 소비구조: 2015~2019년 평균, 대분류 기준	42
[그림 2-5] 아동가구 집단별 소비구조 비교: 2015~2019년 평균, 대분류 기준	43
[그림 2-6] 2세대아동가구 집단별 소비구조 비교: 2015~2019년 평균, 대분류 기준	45
[그림 2-7] 소득분위구간의 소비비중 격차: 2015~2019년 평균, (1~4)분위-(5~10)분위	47
[그림 2-8] 가구 집단별 소비지출 비중 추이: 2015~2019년, 가계지출 기준	49
[그림 2-9] 가구 집단별 지출액 및 증가율 추이: 2015~2019년	50
[그림 2-10] 2세대2아동가구의 지출액 및 증가율 추이: 2015~2019년	51
[그림 2-11] 2세대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액 및 증가율 추이 비교: 2아동 vs. 다자녀	52
[그림 2-12] 가구 집단별·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2015~2019년	53
[그림 2-13] 소득분위별 가구원수 및 아동수 등 분포: 2018년 평균 기준	62
[그림 2-14] 소득분위별 한부모가구 및 장애가구 분포: 2018년 기준	63
[그림 2-15] 소득유형별 소득분포 비교: 아동가구, 2018년 기준	65
[그림 2-16] 소득유형별 소득분포 비교: 무자녀가구, 2018년 기준	66
[그림 2-17] 가구 집단별 소득 추이 비교: 2015~2018년 평균	70
[그림 2-18] 가구 집단별 빈곤율 추이 비교: 균등화 효과, 2015~2018년	74
[그림 3-1] OECD 국가들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 추이: GDP대비, 2015년 기준	90
[그림 3-2]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 비교: OECD 평균 vs. 복지국가 유형별 vs. 한국	91
[그림 3-3]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 비교: 현금유형 기준	92
[그림 3-4] 가족및교육 공공재정지출 비중: 아동 연령별, 2003~2013년	93
[그림 3-5]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교: 현금 유형, 가족형태 및 수입원별, 2018년 기준	94
[그림 3-6]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 비교: 현금 유형, 막내아동 연령 기준, 2018년 기준	95
[그림 3-7]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교: 현금 유형, 가구내 아동수별, 2018년 기준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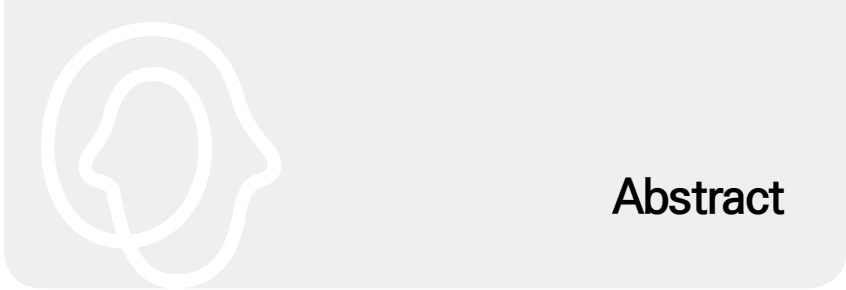


[그림 3-8] OECD 국가들의 빈곤율 현황: 전체 vs. 아동, 2016년/최신년도 기준 97

[그림 3-9] OECD 국가들의 아동 빈곤율 추이: 2006년 vs. 2011년 vs. 2016년 98

[그림 3-10] OECD국가들의 아동 빈곤율: 한부모가구 vs. 전체근로가구등, 2016년기준 ... 99

[그림 3-11] OECD 국가들의 아동 빈곤율: 실직가구 vs. 전체근로가구등, 2016년기준 .. 100



Abstract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economic fluctuations on child rearing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child allowance through case studies of major countries

Project Head: Lee, Youngsu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HIES), the consumption of child household is larger in size and propensity to spend than no-child household. And as the proportion of education expenses is high, consumption for leisure and housing decreases especially in school-age, multi-child, and low-income households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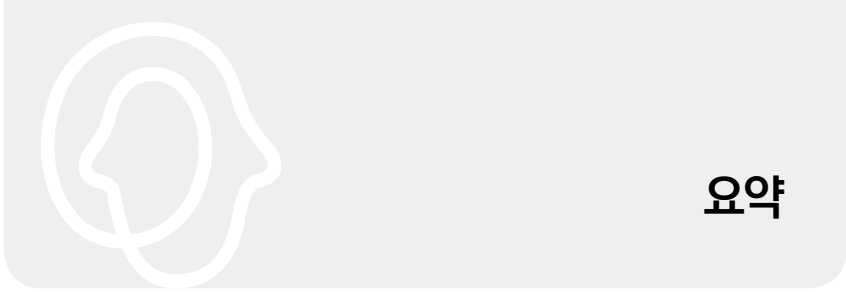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In the analysis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he effect of raising the poverty rate of child support based on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in 2018 was 3.5%p, the effect of lowering the poverty rate of the child sector's wage is 1.0%p related to childcare, 0.09%p child allowance (September to December), and 0.05%p CTC.

Given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raising children and the institutional examples of OECD countries, the current child allowance needs to be expanded into a more multi-layered

2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support system by expanding the age group, adding selective support based on the number of children, and combining systems for the vulnerable class such as single-parent, dual-income, and unemployed households.

Keyword : Child household, Infancy household, School age household, Public transfer, Poverty rate, Cash benefits, Child allowanc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하락해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초저출산의 상황은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아동지원 정책은 2015년 조세환급제도인 자녀장려금(CTC) 도입으로 확대되었고, 최근 2018년 9월부터는 아동부문의 대표적인 현금급여제도인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국제적 준거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양육가구(이하 '아동가구')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보탬이 되는 현금급여의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게 사실이다. 보육은 서비스(현물)로 주어져 이외의 양육비용을 충당할 수 없고, 조세혜택은 소득정산 후에 이루어져 가구가 수급할 때까지 1년여의 시차가 있게 되고 일회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아동양육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 가계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아동가구가 자녀가 없는 가구(이하 '무자녀가구')에 비해 갖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온 글로벌 주요국들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현황과 아동수당 제도 운영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정책 중 현금급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가계의 미시자료 분석과 국제 사례연구로 구성된다. 미시자료 분석은 아동양육가구의 소비(지출)측면과 소득(수입)측면으로 구분하였고, 국제 사례연구는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과 아동수당제도 운영사례를 연구하였다.

아동가구의 소비는 무자녀가구와 비교하여 소비구조 및 경제여건의 변화시 소비행태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가구조사의 대표성을 갖고 소비지출 품목이 상세히 조사되는 가계동향조사로 하였고, 분석기간은 경기확장기('15~'17년)와 수축기('17~'19년)를 포괄하는 2015~2019년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가구는 무자녀가구에 비해 소비지출금액이 크고 교육비에 상당히 집중된 구조로, 경기 확장기에 소비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고 수축기에 소비감소가 작은 등 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2세대2아동의 영유아가가구 보다 학령기가구에서 보다 뚜렷하였다. 그리고 아동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에도 교육 소비는 확대하며 오락·문화, 교통, 의류·신발, 통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소비를 조정하는 특징을 보였다.

아동가구의 소득 분석에는 2015~2018년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였고, 소득 현황 및 빈곤율 분석을 하였다. 아동가구의 소득 수준은 1차 소득 기준으로 무자녀가구의 소득 대비 2배 가량 높은데, 비소비지출 및 가구원 부양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가 반영되는 균등화가처분소득으로는 무자녀가구와의 소득격차가 1.5배 가량으로 작아진다. 1차소득 기준으로 아동가구는 소득 5분위 이상에 집중되는 반면, 무자녀가구는 저소득층인 1~3분위에 집중된다.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아동가구가 집중되는 소득분위대는 4~7분위로 다소 낮아지나 무자녀가구의 소득분포는 크게 달라

지지 않았다. 이러한 소득분포의 특성에 따라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소득 유형별로 4~7%로, 30~40%대의 무자녀 가구 대비 낮은데, 균등화소득 기준 빈곤율은 아동가구에서 2.4~3.5%p 높아지는 반면, 무자녀가구에 서는 3.8~7.8%p 가량 하락하였다. 아동양육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보다 클 수 있는 한부모가구는 아동가구 내 4~5%인데, 빈곤아동가구 중 비중은 15~22%로 높다. 아동부문에 대한 공적이전은 영유아 아동에 대한 '보육관련'이 가장 큰데, 보편주의 방식에 따라 영유아 아동수가 집중된 소득 4~7분위의 수혜비중이 높았다. 특히, 보육관련은 소득이 감소한 2016년에 빈곤율 개선효과가 높아졌고('15년 1.1%p→'16년 1.7%p), 소득이 증가한 2017~2018년은 작아졌다('16년 1.7%p→'17년 1.3%p →'18년 1.0%p). 2018년 9월부터 4개월간 지급된 아동수당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0.09%p인데, 연간 환산시 보다 높아질 것이다. 2015~2018년 소득추이를 보면, 아동가구의 소득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무자녀가구에 비해 경기후퇴에 따른 소득감소도 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증가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기 수축기의 소득 감소의 영향이 아동가구에서 보다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율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2018년에 다소 상승하였다. 이는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빈곤선 아래의 가구수가 많아진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2017년 기준 1.3%로 OECD 37개 회원국 중 34위이다. OECD의 가족부문 공공재정 지출은 2017년 평균 2.34%로 우리나라 대비 1.8배 가량 높다. 유형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서비스나 조세경감은 OECD 국가들 중 중간 순위 정도 되는데, 특히 현금 비중은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OECD 평균 현금 비중은 1.16%로 유형 중 가장 높은데, 우리나라는

6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0.15%로 비중이 가장 낮다. 아동 연령대별로 보면, OECD 평균 기준으로 0~6세 아동은 현금 및 조세경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 비중이 높은 반면, 6~11세에서 12~17세로 갈수록 현금 및 조세경감의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교육 비중이 높아지며 전체 공공재정지출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들은 대체로 가구내 아동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커지고, 한부모가구와 같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크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2016년 기준 15.2%로 OECD 37개 회원국 중 27위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높아진 아동빈곤율은 이후 하락하고 있는데, 한부모가구 아동빈곤율이나 실직가구 아동빈곤율이 여전히 매우 높다.

현금급여 중 대표적인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1960년대 이전에 도입되어진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제도로, 대체로 만 15~1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출산 제고와 아동연령이나 가구내 아동수에 따라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보편주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차등방식을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

3. 종합 및 정책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는 1) 아동가구의 교육비를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다른 소비지출의 제약이 있고, 2) 아동양육에 따른 비용발생에 따라 소득감소효과가 상당한데 이에 대한 공적이전효과는 크지 않고, 3) 아동부문 공적이전 중 영유아 아동에 집중되는 보육 관련 비중이 가장 크고, 4) 아동부문 공적이전의 빈곤율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의 빈곤율이 높고, 5)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의 가족부문 지원은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향후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아동양육에 필요한 소득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현금급여제도인 아동수당이 우리나라는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에 한하여 매월 10만원(연간 최대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교육비를 중심으로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의 연령대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양육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부모가구나 다자녀가구, 실직가구 등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양육환경을 반영하여 이들 가구들이 빈곤가구가 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다층적인 지원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아동가구, 무자녀가구, 공적이전, 빈곤율, 현금급여, 아동수당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동(가족)정책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의 대상이자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통합과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경제성장의 잠재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김수정·정익중(2017)의 선행연구와 Pearce J. (2011), Holzer, Schanzenbach, and Ludwig(2008), Hirsch(2008), Wada & Igararchi (2014) 등 많은 해외 연구들에서 아동 빈곤은 성인기의 정신건강은 물론 낮은 학업성취에 따른 생산성 손실이나 실직 등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제적으로 아동(가족) 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현금성 급여인 아동수당(child benefit, child allowance)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가구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다. 아동수당은 1900년대 초 뉴질랜드와 프랑스 등에서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로, 이후 OECD 국가들로 확산되며 아동부문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정착되었는데, 특히 1960년대 많은 국가들에서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사회주의가 붕괴한 1990년대 초 이후에는 많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빈곤아동가구에 대한 지원과 출산율 제고 등을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수당 제도가 없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국가들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가장 후발 국가로,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소득 하위 90%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만 0~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행되었고, 2019년부터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보편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며 당해 9월부터 만 6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듯 늦게나마 아동수당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법률상 아동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 중 학령기가 제외되어 대상을 아동기의 1/3에 국한하고 있고 지급금액이 아동수당법에 정액으로 명시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적 소득효과가 떨어지는 등 여전히 제도상 한계가 있다.

대다수 해외 국가들에서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연령대 이후에도 학업 등 요건이 충족되면 청년기를 포함하여 대상연령을 연장하고 있고,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기초수당의 성격을 갖는 보편급여를 기본으로 하되 가구의 아동수나 출산율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목표를 추가하여 제도를 중첩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정책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아동지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에 대한 시간 및 현금 지원과 영유아 아동 보육에 대한 서비스 지원, 한부모나 장애아 등 일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며 보육정책의 근간이 마련되었는데, 본격적인 출산·양육 지원정책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서 조사되는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초에 2명 이하로 낮아졌고, 2000년대 중반 1.1명을 기록한 후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하락세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¹⁾을 시작으로 이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어 왔고, 최근 2020년에는 2021~2025년의 제4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보 및 보육료 지원 확대, 가정양육수당 도입, 보육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등이 이루어졌고, 2차 기본계획에서는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및 만 5세 무상교육(누리과정) 도입 등이 이루어졌고, 4차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2022년부터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꾸러미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이 15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대부분 영유아 보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도 초·중등 의무교육과 초등 저학년 돌봄교실, 초·중등 무상급식, 최근 고등학교 무상급식 및 의무교육 도입 등에 국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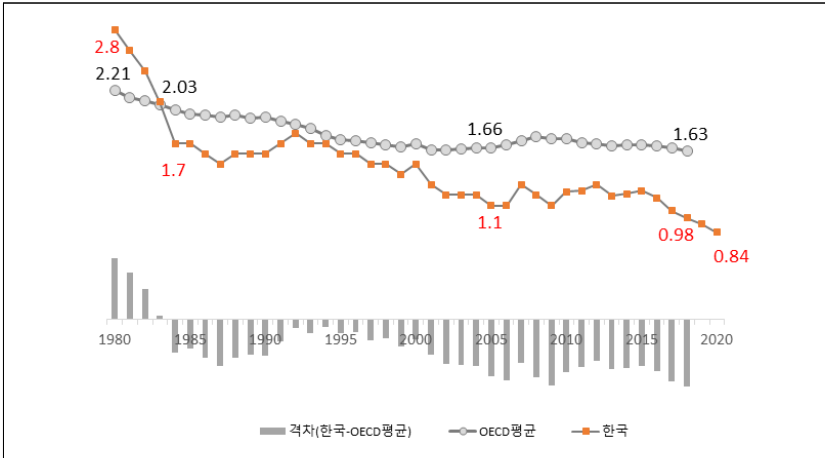
그러나 정책지원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6년 이후에도 1명대의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최근 2020년에는 0.84명을 기록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1.3명이상인데, 출산 하위국인 스페인·이탈리아(1.3명), 핀란드·독일·일본·룩셈부르크·폴란드·포르투갈(1.4명) 등도 초저출산율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출산율의 하락세는 OECD 모든 국가들에서 진행되어 왔고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였음을 감안하면,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하락세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2015년부터 우리나라와 OECD 평균 합계출산율과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1) 2005년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제20조제1항 및 제2항)

14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그림 1-1] 합계출산율 추이: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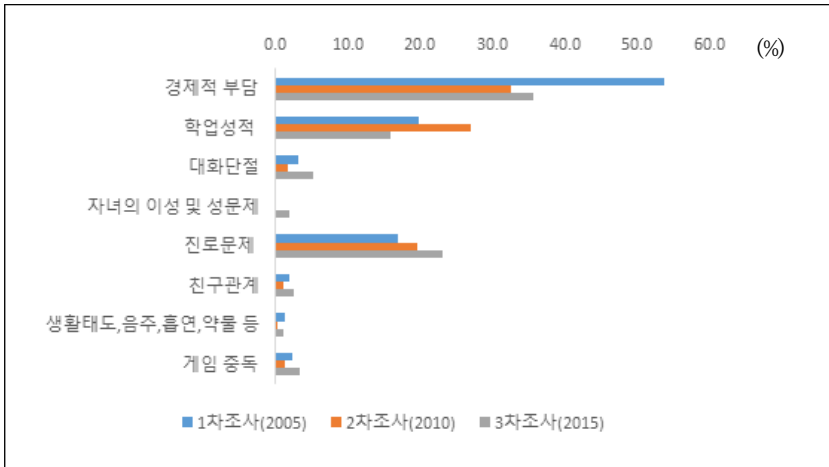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4.12. 인출해 분석한 결과임.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은 크게 돌봄 지원과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돌봄 지원은 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및 육아휴직 등 시간과 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지원이고, 경제적 지원은 직접적인 현금지원과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적인 현금지원으로 이루어진다. OECD 가족 분야 사회보장지출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시간과 서비스로 지급되는 현물지원과 조세감면으로 주어지는 간접적인 현금지급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과 유사하나, 현금지원은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불평등 심화 등으로 아동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이 15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대부분 영유아 보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도 초·중등 의무교육과 초등 저학년 돌봄교실, 초·중등 무상급식, 최근 고등학교 무상급식 및 의무교육 도입 등에 국한되었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2015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양육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응답한 비율이 35.7%로 자녀의 진로문제(23.0%), 학업성적(15.9%)이나 대화단절(5.1%) 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확대되어 온 보육 및 교육 지원이 간접적으로 이러한 자녀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낮추었으나, 이외 식비와 의료비, 문화비 등 일상적인 비용과 높은 사교육비 부담 등을 감안하면 아동양육 가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낮아지며 직업군의 변화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아동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림 1-2] 가족실태조사: 자녀 양육시 느끼는 어려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isticsList>에서 2021. 3. 8. 인출해 분석한 결과임.

더욱이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아동(가족) 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10년 이상의 논의와 검토 끝에 지난 2018년 아동수당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이제는 더 나아가 아동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에서 현행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동수당은 제도 자체가 아동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이를 기반으로 제고 개선방안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제여건에 따라 살펴보고, 국제 제도비교를 통해 현행 아동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아동양육 행태변화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경제여건의 변화 시 아동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가구 단위의 조사자료에 기반하는데, 분석 대상 가구를 아동양육 여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경제여건 변화시 각 집단별 행태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년도의 미시 조사자료나 패널자료를 이용해야 하는데, 해당 자료는 아동가구의 구분과 소득 및 소비, 관련 아동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

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이다²⁾. 가계동향조사는 우리나라 가구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미시조사 자료인데, 가구의 소비지출 관련 조사 항목이 매우 상세한 장점이 있다. 다만, 인구·가구구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7년에 조사응답가구의 표본설계를 바꾸어 가구의 대표성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시계열 자료로서의 일치성이 낮아졌고, 2017년부터 지출 부문 자료로 특화되면서 아동가구의 소득 관련 조사가 단절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자료부터는 연간 소득의 경우 5분위와 10분위 등 소득 분위별 자료로 제한되고, 소득 부문 조사도 정부 보조금이나 정부 이전소득 등으로 분류되어 아동수당 등 구체적 항목이 구분되지 않는 등 미시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자료는 아동가구의 양육관련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하여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자료는 소득 관련 상세 정보와 함께 지출 항목도 조사가 되는 장점이 있다. 동 자료는 아동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정부 이전소득 자료가 포함되고, 복지패널의 특성상 취약계층에 한하여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수당 등이 구분되어 조사된다. 다만, 동 자료는 전체가구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방향으로 응답자의 표본설계를 했어도 패널자료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대표성이 다소간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특히, 아동가구의 경우 상당비중의 조사가구가 당초 설계된 대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낮은 연령의 아동가구는 패널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추가됨으로써, 가구집단을 고정하여 복지 현황 및 추이를 추적 조사하기에는 유용하나, 아동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2)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부문에서 대표성을 갖는 자료인데 금융자산·부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아동지원 관련 정부보조금의 상세내역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19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2.875만원으로, 가계동향조사의 2.282만원과 차이가 크나, 한국복지패널자료의 2.694만원과는 차이가 크지 않다.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조사자료나 패널자료는 아동가구에 대한 대표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응답자의 표본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³⁾, 다년간의 시계열 분석이라 하더라도 가구구성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비교적 단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한국복지패널의 이러한 문제점은 작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아동가구에 주어지는 정부 이전소득 및 보조금 등 현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각 제도들의 정책효과를 아동수당과 비교 분석하였다. 아동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지급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보편적 급여와 선별적 급여로 구분되고, 성격에 따라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으로 구분된다. 보편적 급여는 가구소득에 차등을 두지 않고 대상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는 것으로, 아동수당이 대표적 사례이다. 선별적 급여는 가구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한부모 수당이나 자녀장려금 등이 해당된다. 동 분석은 해당되는 자료가 가장 충실하게 포집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었는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제도들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기 위해 다년간의 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아동수당 사례를 최근 자료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아동부문에 도입된 최초의 보편적 복지급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취학 영유아에 한하여 지급이 되고 있고 수당금액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한 부분이 많다. 저출산 문제 극복과 아동복지 실현은 이미 글로벌 주요국의 경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유럽 등 신흥국에서도 우리나라 보다 먼저 이러한 취지의 제도도입을

3) 아동양육 관련 대표성 있는 조사자료로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있으나, 동 자료에는 아동가구의 일반특성이나 아동의 건강, 관계, 양육 및 돌봄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동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출에 대한 상세정보는 조사되고 있지 않다.

빠르게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에 대한 국제적 준거를 살펴 본다는 취지에서 관련된 국제기구의 자료원과 국가별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 아동수당 운영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현행 우리나라 아동수당 제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경제여건 변화의 아동양육 영향

제1절 연구방법

제2절 연구결과

제 2 장 경제여건 변화의 아동양육 영향

제1절 연구방법

본 절에서는 경제여건의 변화가 가계의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 부문과 소득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동양육가구(이하 ‘아동가구’)는 아동을 가구원으로 부양함에 따라 자녀가 없는 동일 소득의 성인가구에 비해 대체로 소비지출 금액이 커지고, 아동양육에 고유한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지출의 패턴이나 특성도 다르게 될 것이다. 특히 아동가구는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경기수축기에 일반적인 생활필수품 외에 아동양육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서도 소비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 소비의 경직성이 보다 클 수 있어, 아동이 없는 가구(이하 ‘무자녀가구’)에 비해 소득 상실이나 감소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보다 가중될 수 있다. 그런데 아동양육에 따르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혼인가구의 출산이나 양육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장 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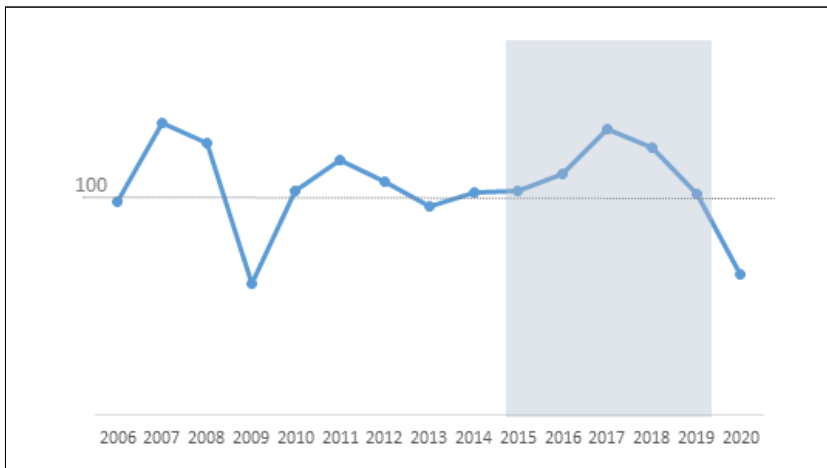
아동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계소득의 변동에서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경기수축기에 가계소득은 정체하거나 감소하게 되는데, 이 때 아동양육을 위한 소비지출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증가한다면 다른 가구원의 소비가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아동가구는 무자녀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또 만약 이 때 아동양육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줄이게 된다면, 양육환경이 불안해지며 아동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에는

24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소비와 소득지출을 중심으로 아동 가구와 무자녀가구간 차이를 살펴보고, 경제여건의 변화 시에 아동가구가 받는 영향을 무자녀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여건의 변화는 경기 확장기와 수축기로 구분될 수 있어, 최근의 경기순환주기 중 두 경기국면이 포함되는 2015~2019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였다⁴⁾. 통계청의 경기국면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2015~2017년은 동 지표가 국면전환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는 확장기에 해당되고, 2017~2019년은 ‘100’을 하회하는 수축기에 해당된다.

[그림 2-1]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2008-2020년



주: 월별 단위의 원자료를 1~12월에 대해 월평균 값으로 연간화한 자료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isticsList> 2021. 3. 8. 인출, 저자 분석.

4)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동 기간 중 2013.3.~2017.9.은 제11순환주기의 확장기(잠정)에 해당되고, 이후 기간은 진행 중에 있는 수축기에 해당된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2021.3.).

가.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는 소비와 소득 부문이 서로 다르게 이용되었다. 분석 대상이 기본적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양육 현황과 이를 기준으로 소비와 소득 부문의 자료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점에서 아동 가구의 현황이 충실하게 조사되는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비지출 분석에서는 가구조사로서 대표성이 있고 소비지출 품목이 상세하게 구분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다⁵⁾. 동 자료는 매해 1만개 내외의 가구를 표본으로 하여 가구주와 의 관계, 연령, 종사상 지위 등 가구원 정보와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 가구구성 관련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그리고 소비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등 12개 항목으로 대분류되고 다시 세분류되어 총 100개의 항목이 조사되어, 가계의 아동양육 관련 소비지출도 구분되는 장점이 있다⁶⁾. 단, 가계동향 조사는 2017년부터 가계지출 부문 조사로 특화되며 소득과 비소비지출 부문에서 조사 항목의 변동이 있었으나, 소비지출 항목은 개편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⁷⁾.

그리고 경제여건의 변화가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경기 확장기와 수축기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때 2000년대 중반 이후 가구유형 및 아동수 감소 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기간은 경기국면을 포함하는 가장 최근의 기간

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조사의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아동가구 정보 및 소비지출 항목 구분이 상세하지 않아 소비지출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6)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소비의 지출항목을 포함한다.

7) 지출부문의 조사방법이 변경되었는데, 2016년 이전 가계부 기입방법(36개월 조사), 2017~2018년 가계부 기입(1개월)과 면접조사(지난 1년간 지출) 병행, 2019년 이후 가계부 기입 방식 등으로 변경되었다(통계청 “2020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2020)

인 2015~2019년으로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간 중 2015~2017년은 경기 확장기에, 2017~2019년은 경기 수축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소득부문 자료에서는 아동가구와 무자녀가구에 대해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함께 정부 지원의 정도를 반영하는 보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상세하게 조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로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였다. 복지패널의 경우 아동가구의 아동수와 아동연령에 대한 정보와 함께 공적 급여 현황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아 가족 등 취약계층의 아동가구에 대한 구분 및 관련 자료가 가능하고, 공적이전이 기초생활급여에서 보육 관련 급여, 자녀장려금 등 세제지원, 현금급여인 아동수당 급여 등으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다. 다만, 복지패널은 연구 시점에서 패널조사의 최신 자료가 제14차 웨이브의 2018년으로, 앞서 소비지출 분석의 2015~2019년 중 경기수축기의 특징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2019년의 정보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이용된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복지패널은 현재 시점에서 아동가구의 소비와 소득 부문의 정보를 갖는 가장 적합한 자료이기는 하나, 동 자료의 표본설계가 아동가구의 대표성을 갖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다만,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복지패널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가구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면, 차선의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분석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과 소득분포의 평균적 현황과 경제여건이 다른 경기 확장기(2015~2017년)와 수축기(2017~2019년)의 소비지출 및 소득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무자녀가구와 비교함으로써 아동가구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경제여건의 변화시 가구별로 차등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한 선에서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에 해당될 수 있는 저소득 아동가구 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1) 아동가구의 소비지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지출 분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기초분석으로 아동가구 관련 기초정보를 요약했는데, 분석 기간인 2015~2019년에 연도별 가구수와 아동수를 전체와 가구별, 소득분위별 등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이 아동수나 부모와 아동 외 기타 가구원 구성 여부, 가구주 연령에 따른 소득수준이나 소비패턴 등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를 총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아동가구의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득 현황 및 변화를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부모와 아동만으로 구성되는 2세대 가구로 한정하였다. 이는 3세대나 기타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이 아동 외 부양가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연령대를 평균 초산 연령과 연령대별 경제활동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아동의 부(父)⁸⁾의 연령대를 만 35~50세로 한정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최근 모(母)의 초산 연령대가 32~33세이고 평균적으로 부(父)의 연령이 모(母)에 비해 높음을 감안하였다. 그리고 아동양육 주체의 주된 연령대와 소비 및 소득 수준의 유사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다음으로 가구내 아동수는 1~2명의 경우로 하였다. 이는 가계동향 조사의 아동수가 1~2명인 가구의 비중이 90%를 상회하여 높고⁹⁾, 통상적인 가구 아동수와도 일치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보육료나 아동수당 등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이 주로 유아기에 집중됨을 감안하여, 동 집단을 다시 유아기와 학령기로 구분하였다. 「아동복지법」상¹⁰⁾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고 일반적인 초등 입학 연령이 만 7세임을 감안하여, 영유아기가구는 만 0~6세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로, 학령기 아동은 만 7~17세 아동만 포함하는 가구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분석 대상가구는 2세대 2아동의 '영유아기가구'(아래의 'G1'), 2세대 2아동의 '학령기가구'('G2'), 가구유형 등 구분이 없는 '아동가구'('G3'), 전체가구에서 아동가구를 제외한 '무자녀가구'('G4'), '전체가구'('G5')의 총 5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 (G1) 2세대 부(父) 35~50세, 2명 이하 영유아기가구(만 0~6세 포함),
- (G2) 2세대 부(父) 35~50세, 2명 이하 학령기가구(만 7~17세),
- (G3) 아동가구, 만 0~17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
- (G4) 무자녀 가구, 아동이 없는 가구(G5-G3)
- (G5) 전체가구

8) 가계의 주된 경제활동이 부(父)를 중심으로 이루어고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9) 2019년 가계동향조사의 2세대 아동가구 중 아동 1명 44.3%, 아동 2명 47.5%이다.

10) 제3조제1항에 의한다.

상기한 총 5개 가구 집단을 기본으로 하되, 아동양육의 경제적 환경이 보다 다를 수 있는 다자녀가구와 저소득분위의 아동가구를 별도로 구분하였고, 아동가구의 세부집단인 G1 및 G2와 비교하기 위해 부(父)의 연령대를 만 35~50세로 설정한 무자녀가구를 추가하였다.

우선 다자녀가구는 가구내 아동수가 3명 이상인 경우로, 아동가구집단 G1, G2에서와 같이 다자녀 중 1명 이상의 아동이 만 0~6세에 속하는 영유아가가구(‘아래의 G1_m’)와 아동 연령이 모두 만 7~17세에 속하는 학령기가구로 구분하였다(‘G2_m’). 다만, 이 경우 2019년 가계동향조사 기준 전체 아동가구 중 아동 3명인 경우는 7.4%, 아동 4명 이상인 경우는 0.8% 등으로 비중이 10% 내외로 높지 않아, 정보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가구와 비교 집단이 되는 무자녀가구의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가구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G1, G2에서와 같이 가구주 연령대를 만 35~50세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G4_c’).

- (G1m) 2세대 부(父) 35~50세, 3명 이상 영유아가가구(만 0~6세 포함),
- (G2m) 2세대 부(父) 35~50세, 3명 이상 학령기가구(만 7~17세),
- (G4c) 가구주가 만 35~50세인 무자녀 가구

저소득가구는 전체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1~4분위에 속하는 아동가구로 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자료는 2017년 개편 이후 소득 10분위 기준으로만 제공되어 있어 소득분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중위소득이 소득 5~6분위의 중간에 해당됨을 감안하여 저소득구간대를 4분위 이하의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렇듯 가구 집단을 구분한 다음에 아동가구의 소비지출 분석은 몇 개의 기준 지표를 설정하여 집단간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준 지표는 기간 중 월평균 가구당 소비지출 금액 및 전년대비 증가율, 소비품목별 소비지출 구조 및 전년대비 증가율로, 이들의 가구 집단별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분석은 준거집단이 되는 아동가구의 해당 값을 무자녀가구와 저소득 가구, 다자녀 가구 등 비교집단의 값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기간은 아동가구의 소비지출 특성에 대한 기본 분석에서는 2015~2019년의 전체 기간으로 하였고, 경제여건에 따른 집단별 소비지출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경기 확장기인 2015~2017년과 수축기인 2017~2019년을 구분하였다.

2) 아동가구의 소득

소득에 대한 분석은 한국복지패널(이하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동 자료는 패널자료의 특성상 조사대상 가구가 대체로 유지되어 해당 가구의 소득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구 시점에서 2019년 실적 자료인 제15차 웨이브가 발표되지 않아, 분석 자료는 2015년 실적의 제11차 웨이브(2016)에서 2018년 실적의 제14차(2019) 웨이브까지 총 4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자료의 분석 기간은 2015~2018년이 된다.

가구의 소득 분석은 크게 1차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1차소득은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의 합계금액으로, 경상소득(즉, 총소득) 중 경제여건의 변화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¹¹⁾. 그런데 복지패널에서는 가구원별 조사에 근거해 경상소득과 각종 사회보장 부담금 및 조세 등 비소비지출이 제외된 가처분소득만을 제공

하고 있어, 가구의 1차소득은 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경상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은 복지패널이 제공하는 전체 사회보장급여가 해당되는데, 이중 아동가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춤형 급여와 기타 정부보조금 중 아동요건과 관련성이 있는 항목으로 하였다. 맞춤형 급여는 수급기준이 급여별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률(30~50%) 이하로 되어 있고,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 저소득층 아동가구 지원의 성격이 있다. 정부보조금 중에서 아동 관련 급여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위탁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지원, 급식비 지원, 아동수당, 자녀장려세제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일회적이기는 하나, 주소득자의 사망, 학대·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저소득가구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금¹²⁾을 추가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한부모가족지원·가정위탁금은 취약계층 아동가구 지원으로, 양육수당·보육료 지원·학비지원·급식비지원은 보육 관련 지원으로, 아동수당은 아동가구에 대한 보편 급여로, 자녀장려세제¹³⁾는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볼 수 있다.

11) OECD의 소득구분에 따른 것으로, 경상소득(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 소득 등의 합계금액인 1차소득과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12)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해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임시거소, 초·중·고 학비 등이 지원된다.

13) 근로장려세제는 2014년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되면서 이전의 부양자녀별 차등지원 구조에서 가구유형별(단독·홀벌이·맞벌이) 지원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외하였다.

32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표 2-1〉 한국복지패널의 이전소득 구분

구분		내용
사적이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 민감보험(개인연금+퇴직연금) • 기타 민간보조금
공적 이전소득	사회보험급여	•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맞춤형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국가유공자보조금, 농업정정부보조금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위탁금 •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아동수당 •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 에너지감면, 통신비 감면, 기타 보조금

주: 1) 제1~10차 웨이브의 공적이전소득은 기초보장급여, 제11차 웨이브는 기초보장급여와 맞춤형 급여, 제12차 웨이브부터 맞춤형급여만 포함됨.

2) 제도 신설에 따라 제11차 웨이브부터 자녀장려세제가 추가되었고, 제14차 웨이브부터 아동수당(2018년은 9~12월)이 추가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p.19.

소득 분석은 가구별 연평균 1차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하였다. 1차소득은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제여건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장소득의 성격을 갖고, 가처분소득은 1차소득에서 조세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사적·공적이전소득이 더해져 실제의 가계 구매력을 반영하는 소득인 점을 감안하였다. 그리고 동일 소득규모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 따라 가계의 구매력이 차등적일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 각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균등화가구소득을 구하였다. 분석에서는 이러한 지표에 기초하여 아동가구와 무자녀가구의 소득 현황을 평균 소득금액과 소득 10분위별 분포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경제여건 변화 시 아동가구의 소득 영향에 대한 분석은 2015~2018년의 시계열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소득 별로 평균 소득금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구하여 아동가구와 무자녀가구

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가구집단별 비교로 인해 물가상승이나 임금상승 등에 따른 평균적인 소득의 자연증가를 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구집단별 소득 증가율의 차이는 아동가구의 직업군이나 소득 분포상의 특성으로 인해 무자녀가구에 비해 경제여건의 변화에 차등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경기 확장기와 수축기에 아동가구의 빈곤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소득분포 상의 가구별 위치와 경제여건 변화 시 소득분포상의 이동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무자녀가구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경기 확장기(수축기)에는 가구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낮아지면서) 중위소득이 상승(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경기 확장기(수축기)에 아동가구의 소득이 전체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을 상회(하회)하면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하락(상승)하고, 빈곤 갭도는 감소(증가)하게 될 것이다.

$$\text{빈곤율}(\%) = (\text{빈곤 아동가구수} / \text{전체 아동가구수}) \times 100$$

$$\text{빈곤갭} = \sum_{i=1}^n \{(\text{빈곤선} - \text{빈곤 아동가구 소득}) / \text{빈곤선}\} / n$$

단, 빈곤선: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혹은 60%

빈곤가구: 가구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가구

아동가구: 만 18세 미만 아동양육 가구

n : 빈곤 아동가구수

그리고 아동가구 일반에 한부모가구와 장애아가구를 포함하여 취약 계층 분석과 정부의 아동가구에 대한 공적이전 현황에 대한 분석을 더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은 소득분위별로 아동가구의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사회보장급여와 아동가구 지원의 성격을 갖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아동 부문 급여의 성격이 분명한 보육 관련 급여와 한부모 및 장애아 가구 등 취약계층 급여, 조세지원인 자녀장려금, 보편적 현금급여인 아동수당¹⁴⁾을 포함하였다.

제2절 연구결과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아동가구의 소비지출 및 소득 현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1. 소비 영향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5~2019년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의 특성과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중 2015~2017년은 경기 확장기에 해당되고, 2017~2019년은 수축기에 해당된다.

가. 기초분석

1) 아동가구 현황

가계동향조사는 2015년 9,709가구를 표본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7년 8,947가구로 표본수가 다소 작아졌으나 이후 확대되며 2019년

14) 2018년부터 시행되어 한국복지패널 제14차 웨이브에 한해 9~12월 실적이 포함되었다.

20,884가구가 조사되었다¹⁵⁾. 동 기간 중 조사대상 아동가구의 수는 2015년 3,178(32.7%)가구에서 2019년 4,573 (21.9%)가구로 적어졌다. 이는 가계동향조사가 전체가구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동가구의 대표성은 다소 낮아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아동가구 조사를 위해 특화된 미시자료가 없고, 가계동향 조사의 아동가구 비중 감소는 동 기간 중 전체 아동수 감소의 영향을 반영한 것일 수 있고, 2017년을 제외하면 전체가구 수와 아동가구 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감안하면, 연도별 가계동향조사에서 아동가구의 정보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본 비중이 작아 지기는 했으나, 가계동향조사의 아동가구 조사표본수가 2~4천개 내외로 적지 않고(복지패널의 경우 1천개대임¹⁶⁾) 전체 표본가구의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이거나 현존하는 미시자료 중 아동가구 현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자료가 되겠다.

가구집단별 2015~2019년 가구수 현황은 아래의 <표 2-2>와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가구 수가 대체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간 중 아동가구 비중은 32.7%에서 21.9%로 낮아진 반면, 전체가구(G5)에서 아동가구(G3)를 제외한 무자녀가구(G4) 비중은 67.3%에서 78.1%로 높아졌다. 여기에는 2017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설계 등 개편의 영향도 있겠으나,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등에 따른 노인가구 증가와 세대 구성방식 변화 등에 따른 청년가구 증가의 추세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 전용표본 설계, 조사방법 변경, 연간 통계로의 개편 등으로 전년도 결과와 직접 비교는 곤란하고, 표본조사 결과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존재하여 95% 신뢰수준에서 상대 표준오차(1.2~25.7%)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통계청 복지통계과(2018. 5.30.)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 에서 3. 12. 인출)

16) 한국복지패널의 2015~2018년 조사표본은 9,800개로 동일한데, 아동가구는 2015년 1,582가구(16.1%), 2018년은 1,270가구(13.0%)로 가계동향조사 대비 전체 조사표본 수가 적고, 조사대상이 되는 아동가구수나 아동가구수 비중도 작다.

36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아동가구 중 부(父) 35~50세의 2세대2아동가구(G1+G2)는 2015년 1,820가구에서 2019년 2,607가구로 증가했는데, 아동가구 내 비중은 57.3%에서 57.0%로 하락했다. 이 중 만 0~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영유아가 가구(G1)는 2015년 755가구에서 2019년 1,093가구로 증가하였고, 아동가구 내 비중은 23.8%에서 23.9%로 유사하다. 아동 모두 학령기에 속하는 학령기가구(G2)는 2015년 1,065가구에서 2019년 1,514명으로 증가했으나, 비중은 33.5%에서 33.1%로 소폭 낮아졌다.

무자녀가구는 2015년 6,531가구에서 2019년 16,311가구로 증가하며, 전체가구 내 비중이 67.3%에서 78.1%로 높아졌다.

〈표 2-2〉 가구집단별 가구수 현황: 아동양육 여부 기준, 2015~2019년

(단위: 가구, %)

구분	전체가구 (G5)	아동가구 (G3)	2세대2아동			무자녀가구 (G4)
			(G1+G2)	영유아기(G1)	학령기(G2)	
2015	9,709(100.0)	3,178(32.7)	1,820(57.3)	755(23.8)	1,065(33.5)	6,531(67.3)
2016	8,947(100.0)	2,784(31.1)	1,461(52.5)	491(17.6)	970(34.8)	6,163(68.9)
2017	11,469(100.0)	2,705(23.6)	1,560(57.7)	690(25.5)	870(32.2)	8,764(76.4)
2018	11,308(100.0)	2,763(24.4)	1,673(60.6)	733(26.5)	940(34.0)	8,545(75.6)
2019	20,884(100.0)	4,573(21.9)	2,607(57.0)	1,093(23.9)	1,514(33.1)	16,311(78.1)
평균	12,463(100.0)	3,201(26.8)	2,824(57.0)	752(23.5)	1,072(33.5)	9,263(73.2)

주: 1) ()는 비중값으로, 아동가구(G3)와 무자녀가구(G4)는 전체가구 대비, 2세대2아동가구와 영유아기(G1)·학령기(G2) 가구는 아동가구 대비 비율로 산출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아동가구의 집단별 아동수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 2-3>과 같다. 아동수는 2015년 5,402명에서 2019년 7,338명으로 증가했는데, 앞의 <표 2-2>의 아동가구 수와 증감 방향이 동일하다. 기간 중 가구당 평균 아동수는 1.6~1.7명으로 유사하다.

영유아기가구(G1)와 학령기가구(G2)를 합한 2세대2아동가구의 아동수는 2015년 2,966명에서 2019년 2,371명으로 증가했는데, 아동가구 내 비중은 기간 중 54.9%에서 2019년 55.7%로 높아졌다. 아동의 연령대별로 보면, 2세대2아동가구 중 영유아기가구(G1) 아동수는 2015년 1,254명에서 2019년 1,727명으로 증가하였고, 2세대2아동가구 내 비중은 기간 중 변동은 있었으나 2015년과 2019년은 42.3%로 동일하다. 학령기가구 아동수는 2015년 1,712명에서 2019년 2,359명으로 증가했는데, 2세대2아동가구 내 비중은 57.7%로 동일하다.

<표 2-3> 아동가구의 집단별 아동수 분포: 2015~2019년

(단위: 명, %)

구분	아동가구(G3)		2세대2아동 (G1+G2)		
	아동수	가구당 평균 아동수	영유아기(G1)	학령기(G2)	
2015	5,402	1.7	2,966(54.9)	1,254(42.3)	1,712(57.7)
2016	4,742	1.7	2,371(50.0)	846(35.7)	1,525(64.3)
2017	4,405	1.6	2,482(56.3)	1,119(45.1)	1,363(54.9)
2018	4,581	1.7	2,646(57.8)	1,183(44.7)	1,463(55.3)
2019	7,338	1.6	4,086(55.7)	1,727(42.3)	2,359(57.7)
평균	5,294	1.7	2,910(54.9)	1,226(42.0)	1,684(58.0)

주: ()는 비중값으로, 2세대2아동가구는 전체 아동가구 대비, 영유아기(G1)·학령기(G2) 가구는 2세대2아동가구 대비 비율로 산출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아래의 <표 2-4>는 소득10분위 중 저소득구간인 1~4분위 아동가구 수와 아동수 현황이다. 2015~2019년 평균 1~4분위 아동가구는 12.3%, 아동수는 12.6%인데, 전체가구 기준으로 소득 1~4분위 비중이 40%임을 감안하면 아동가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소득 1~4분위의 아동수는 기간 중 평균 1.7명으로, 전체 아동가구의 평균과 유사하다. 그러나 연간으로 보면, 2018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소득 1~4분위의 평균 아동수가 전체 아동가구의 평균 아동수 대비 다소 많다.

2세대2아동가구(G1+G2)에서 소득 1~4분위의 저소득층 가구 비중은 기간 중 평균 7.4%로, 아동가구의 1~4분위 비중 12.3% 대비 낮게 나타난다. 이 중 아동 연령대별로 보면, 영유아가가구(G1)의 소득 1~4분위 비중은 평균 8.0%인데 반해, 학령기가구(G2) 비중은 7.1%로 영유아가 가구 대비 다소 낮다. 이는 아동 연령이 높아지며 대체로 부모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4> 아동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구수 분포: 1~4분위, 2015~2019년

(단위: 가구, 명, %)

구분	아동가구(G3)			2세대2아동		
	(가구수)	(아동수)	(가구당 평균 아동수)	(G1+G2)	영유아(G1)	학령(G2)
2015	345(10.9)	675(12.5)	2.0	122(6.7)	63(8.3)	59(5.6)
2016	287(10.3)	550(11.6)	1.9	78(5.4)	35(7.2)	43(4.4)
2017	411(15.2)	649(14.7)	1.6	146(9.3)	60(8.6)	86(9.9)
2018	373(13.5)	534(10.9)	1.4	132(7.9)	59(8.1)	73(7.7)
2019	537(11.7)	921(11.7)	1.7	202(7.7)	86(7.9)	116(7.7)
평균	391(12.3)	666(12.6)	1.7	136(7.4)	60(8.0)	75(7.1)

주: ()는 비중값으로, 해당 부문의 전체 소득분위의 자료값 대비 소득 1~4분위 자료값의 비율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아래의 <표 2-5>는 부(父) 연령 35~50세의 2세대가구 중 아동 2명 이하 가구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2세대2아동의 정보는 앞의 <표 2-2>와 동일하고, 이와 비교할 수 있도록 2세대다자녀 가구의 정보를 정리하였다. 2세대다자녀가구는 2015년 245가구에서 2019년 292가구로 증가하였는데, 대략 2세대2아동가구와 비교해 1/10 수준의 규모이다. 2세대다자녀가구의 아동가구 내 비중은 기간 중 7.7%에서 6.4%로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패턴은 2세대2아동가구와 동일하다.

2세대다자녀가구 중 영유아기가구(G1)은 2015년 170가구에서 2019년 203가구로 증가하였는데, 아동가구 내 비중은 5.3%에서 4.4%로 하락하였다. 이는 2세대2아동가구의 영유아기가구 비중이 기간 중 소폭 상승(23.8%→23.9%)한 것과 다르다. 학령기가구는 2015년 75가구에서 2019년 89가구로 증가하였는데, 아동가구 내 비중은 2.4%에서 1.9%로 하락하였다. 이는 2세대2아동가구의 학령기가구 비중이 기간 중 하락(33.5%→33.1%)한 것과 동일하다.

<표 2-5> 2세대 아동가구의 가구수 분포: 2아동 vs. 다자녀, 2015~2019년

(단위: 가구, 명, %)

	2세대2아동			2세대다자녀		
	(G1+G2)	영유아(G1)	학령(G2)	(G1m+G2m)	영유아(G1m)	학령(G2m)
2015	1,820(57.3)	755(23.8)	1,065(33.5)	245(7.7)	170(5.3)	75(2.4)
2016	1,461(52.5)	491(17.6)	970(34.8)	203(7.3)	134(4.8)	69(2.5)
2017	1,560(57.7)	690(25.5)	870(32.2)	171(6.3)	120(4.4)	51(1.9)
2018	1,673(60.6)	733(26.5)	940(34.0)	215(7.8)	141(5.1)	74(2.7)
2019	2,607(57.0)	1,093(23.9)	1,514(33.1)	292(6.4)	203(4.4)	89(1.9)
평균	2,824(57.0)	752(23.5)	1,072(33.5)	225(7.1)	154(4.8)	47(2.3)

주: ()는 각 아동가구 집단별 아동가구(G3) 내 비중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2) 아동가구의 소비지출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015~2019년 평균 기준으로 아동가구(G3)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35~50세 무자녀가구(G4c), 무자녀 가구(G4)의 순이다. 아동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기간 중 평균은 332.7만원인데, 무자녀가구 192.9만원, 35~50세 무자녀가구 275.3만원 대비 각각 1.7배, 1.2배 크다. 전체가구(G5)는 235.3만원으로, 무자녀 가구 보다 크나, 35~50세 무자녀가구나 아동가구 보다는 작다.

〈표 2-6〉 가구 집단별 월평균 소비지출금액 추이(1): 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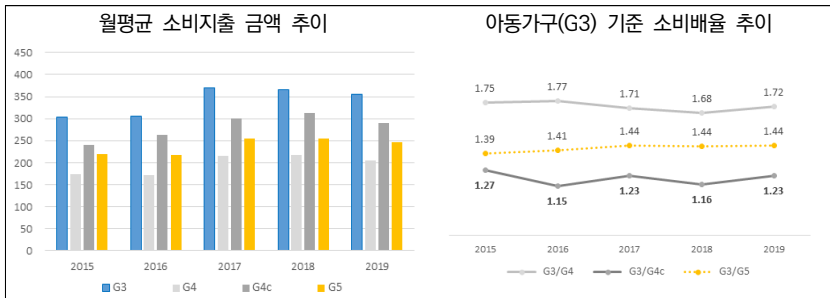
(단위: 만 원, %)

구분	아동가구(G3)	무자녀가구(G4)	무자녀가구(G4c)	전체가구(G5)
2015	304.0	173.7	240.0	219.3
2016	304.7	172.6	263.8	216.5
2017	368.9	215.7	300.2	255.7
2018	364.7	217.6	313.5	253.8
2019	354.5	205.7	289.1	245.9
평균	332.7	192.9	275.3	235.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그림 2-2〕 가구 집단별 소비지출 현황: 2015~2019년

(단위: 만 원, 배)



주: '소비배율'은 가구집단 간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비율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2015~2019년 중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대체로 2세대다자녀가구가 2세대2아동가구 보다, 학령기가구가 영유아가가구 보다 크다. 영유아가가구의 경우 2세대다자녀가구 평균 348.7만원, 2세대2아동가구 322.6만원이다. 학령기가구는 2세대다자녀가구 평균 380.2만원, 2세대2아동가구 376.2만원이다. 2세대2아동가구 대비 2세대다자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배율은 영유아가가구의 배율이 학령기가가구 보다 높은 가운데, 2019년 학령기가가구의 경우를 제외하면 '1' 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

〈표 2-7〉 가구 집단별 월평균 소비지출금액 추이(2): 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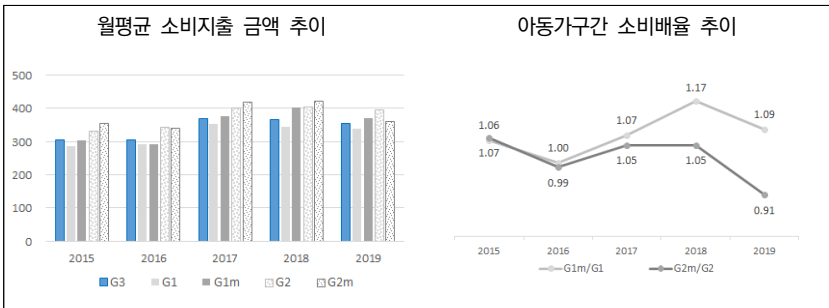
(단위: 만 원, %)

구분	아동가구(G3)	2세대2아동 영유아가(G1)	2세대다자녀 영유아가(G1m)	2세대2아동 학령기(G2)	2세대다자녀 학령기(G2m)
2015	304.0	285.8	303.0	332.5	354.8
2016	304.7	292.9	292.7	345.6	341.1
2017	368.9	351.3	377.2	402.8	421.4
2018	364.7	344.6	401.8	404.1	422.7
2019	354.5	338.5	368.8	396.2	361.1
평균	339.4	322.6	348.7	376.2	380.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그림 2-3〕 아동가구 집단별 소비지출 현황: 2015~2019년

(단위: 만 원, 배)



주: '소비배율'은 가구집단 간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비율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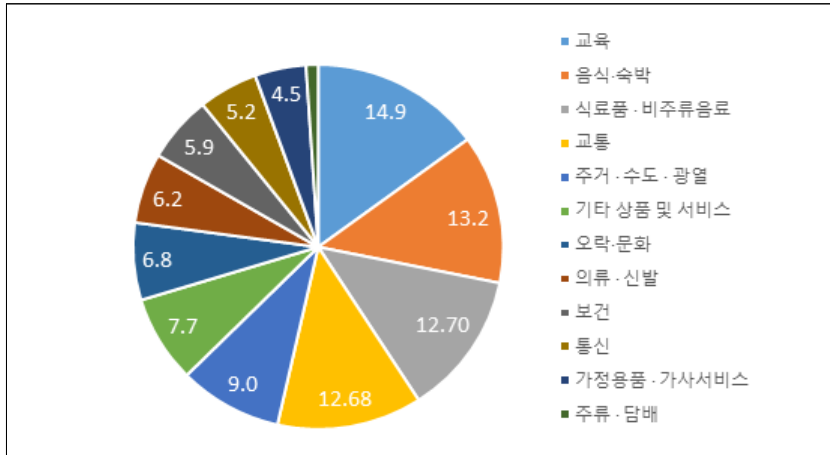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42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2015~2019년 가계동향조사의 대분류 기준 소비품목별 지출액 비중을 통해 아동가구(G3)의 평균 소비구조를 보면, 교육 비중(14.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식·숙박(13.2%), 식료품·비주류음료(12.70%), 교통(12.68%)이 높고, 주거·수도·광열(9.0%), 기타 상품 및 서비스(7.7%), 오락·문화(6.8%), 의류·신발(6.2%) 등의 순서이다.

[그림 2-4] 아동가구 소비지출액의 소비구조: 2015~2019년 평균, 대분류 기준

(단위: %)



주: 1) 2015~2019년 매해 전체 소비지출액 대비 품목별 지출액 비중을 구하여 평균한 값임.
 2)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전 및 가전용기기, 가사용품 등을 포함하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이미용서비스, 위생 및 이미용용품, 기타개인용품, 보험, 기타 금융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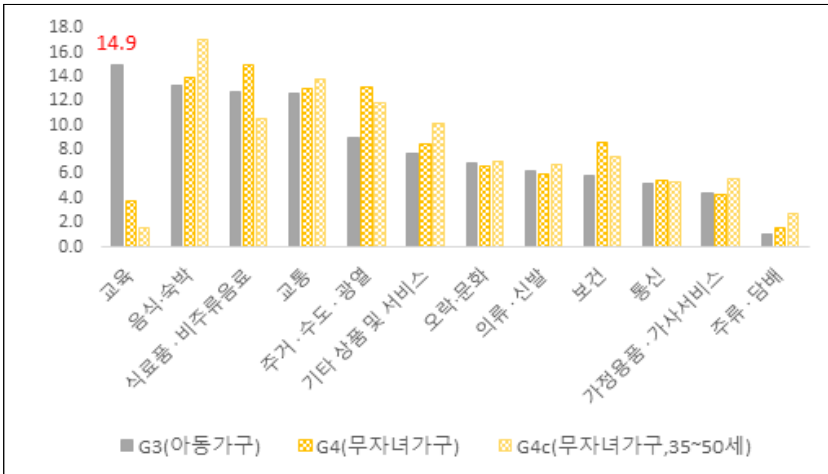
2015~2019년 평균 기준 아동가구(G3)와 무자녀가구(G4)의 소비구조를 비교하면, 아동가구는 무자녀가구 대비 교육 비중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특징을 보이고, 다음으로 의류·신발,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의 비중이 다소 높기는 하나 차이는 미미하다. 이에 반해, 무자녀가구는 주거·수도·광열과 보건, 식료품·비주류음료,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주류·

담배 등의 비중이 아동가구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아동 가구는 미래 인적자본 투자의 성격을 갖는 교육 부문에 대한 소비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기타 주거 및 생활 관련 소비 비중이 낮아지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자녀가구의 소비지출에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가구 영향을 통제 하기 위해, 앞의 아동가구에서와 유사하게 가구주 연령을 만35~50세로 한 무자녀가구(G4c)를 보면, 대체로 전체 무자녀가구(G4)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식료품·비주류음료와 보건, 주거·수도·광열의 소비비중이 다소 낮은 대신, 음식·숙박,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주류·담배, 교통 등 품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5] 아동가구 집단별 소비구조 비교: 2015~2019년 평균, 대분류 기준

(단위: %)



주: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사용품 등을 포함하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이미용서비스, 위생 및 이미용용품, 기타개인용품, 보험, 기타 금융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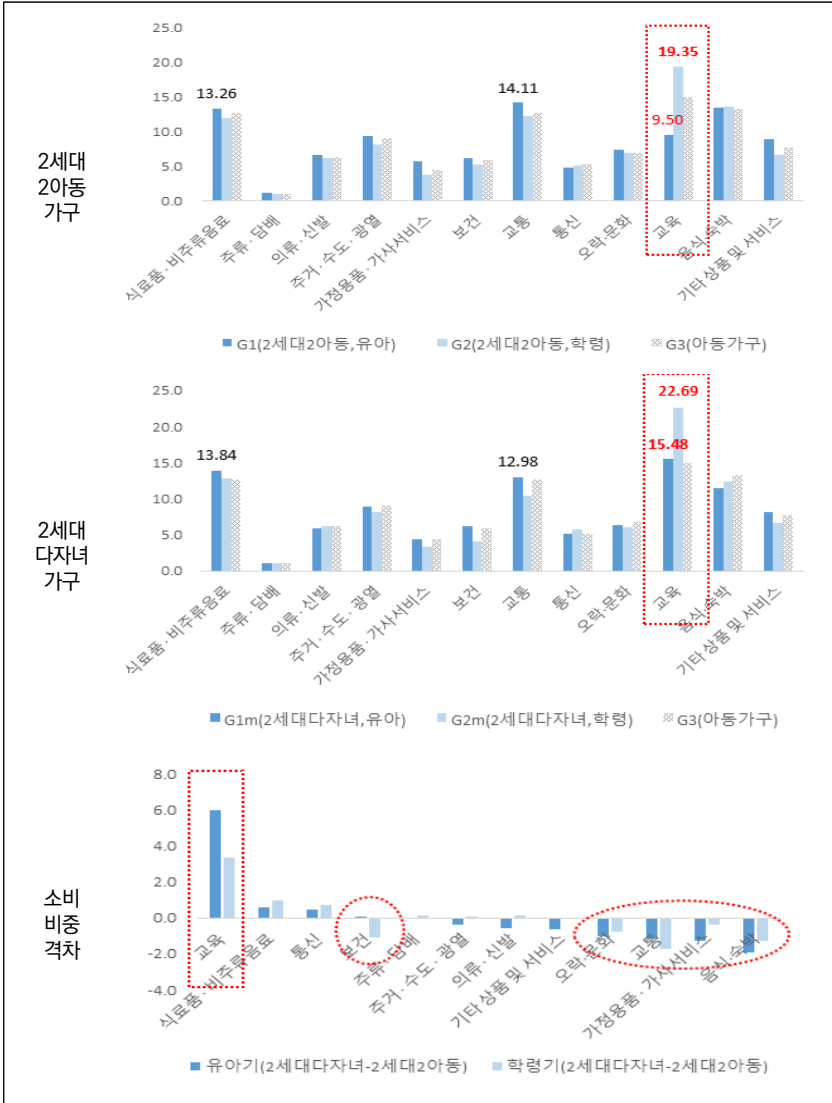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2015~2019년 평균 2세대2아동 가구의 학령기가구와 2세대다자녀가구에서 전체 소비품목 중 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높다. 다만, 2세대2아동가구의 영유아가구는 교육 비중이 크게 높지 않고, 이보다 교통이나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같은 영유아가구의 경우에도 2세대2아동가구의 교육 비중은 9.5%인 반면, 2세대다자녀가구의 교육비중은 15.48%로 1.6배 이상 크다. 학령기가구의 경우 2세대2아동가구의 교육 비중은 19.35%인 반면, 2세대다자녀가구는 22.69%로 1.2배 가량 크다.

다자녀가구의 소비지출이 교육에 보다 집중된 구조를 보임에 따라 다른 소비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은 작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세대다자녀가구와 2세대2아동가구의 품목간 소비비중의 차이를 구해보면, 다자녀가구는 2아동가구 대비 교육 비중이 크게 높고, 가구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필수재 성격의 식료품·비주류음료, 통신의 지출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보건, 음식·숙박, 교통 등을 중심으로 나머지 품목의 경우 다자녀가구의 소비비중이 2아동가구 대비 낮다. 특별히, 영유아가구는 음식·숙박,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오락·문화의 비중이 낮고, 학령기가구는 음식·숙박, 교통, 오락·문화 등과 보건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은 아동수가 많아지고,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계의 소비지출이 보다 교육 부문에 집중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여가와 문화, 서비스 등의 소비여력이 작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6] 2세대아동가구 집단별 소비구조 비교: 2015~2019년 평균, 대분류 기준

(단위: %, %p)



주: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사용품 등,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이미용서비스, 위생 및 이미용용품, 기타개인용품, 보험, 기타 금융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의 소비구조를 5~10분위와 품목별 소비비중의 차이로 살펴보면(아래 [그림 2-7]의 상단), 1~4분위의 소비비중은 주거·수도·광열과 식료품·비주류음료, 통신, 보건, 주류·담배 등 주로 생필품재 품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소득 5~10분위는 교통, 교육, 음식·숙박, 오락·문화, 의류·신발 등 교육과 여가·문화적 성격의 소비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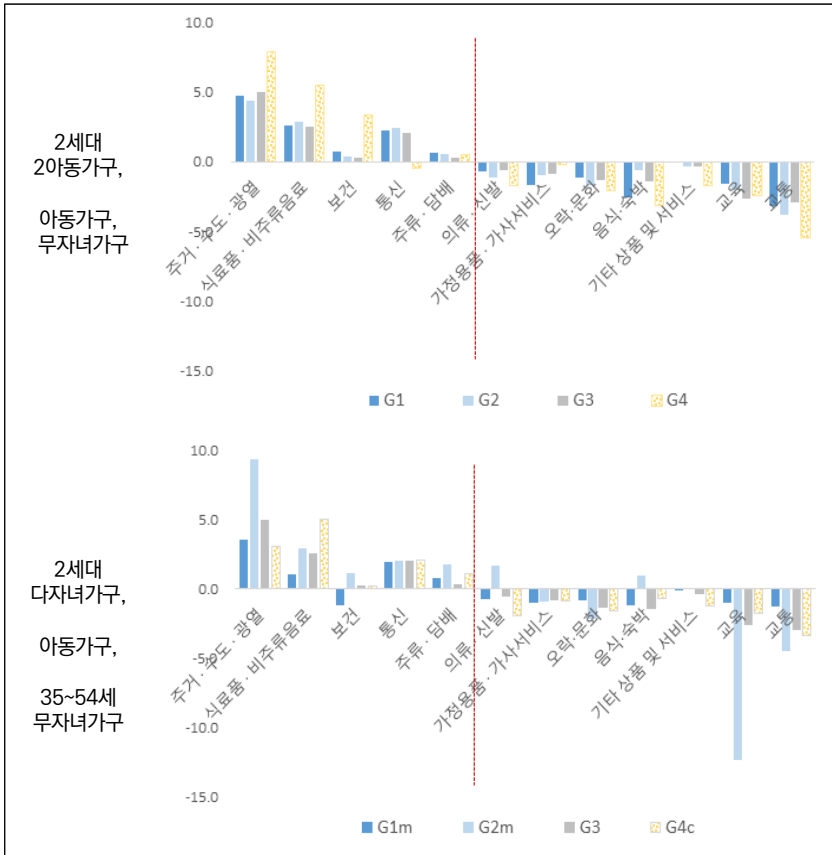
이러한 격차는 아동가구(G1~G3) 보다는 무자녀가구(G4)에서 보다 뚜렷한데, 이는 앞서 <표 2.-4>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가구의 경우 소득 1~4분위의 가구수 비중(12.3%)이 상대적으로 작은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 1~4분위 무자녀가구의 소비비중은 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에서 높고, 교통, 음식·숙박, 교육, 오락·문화 등에서 낮다.

소득 1~4분위의 소비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의 격차는, 2세대 2아동가구의 영유아가가구(G1)는 교통, 음식·숙박, 가정용품·가사서비스·교육에서 큰 반면, 학령기가구(G2)는 교통, 교육, 오락·문화 등에서 크다. 이는 저소득층의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G1→G2) 교육과 오락·문화의 소비가 고소득층 대비 취약해짐을 보여준다.

소득 1~4분위의 2세대다자녀가구의 소비비중 격차를 보면(아래 [그림 2-7]의 하단),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아동연령대가 높아지면서(G1m→G2m) 주거·수도·광열의 필수적 소비비중이 커지며 고소득층과의 격차가 보다 확대되는 반면, 교육 비중은 고소득층 다자녀가구와의 격차가 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가계유지에 필수적인 지출 비중이 높아지며, 미래 투자의 성격을 갖는 교육의 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짐을 보여준다.

[그림 2-7] 소득분위구간의 소비비중 격차: 2015~2019년 평균, (1~4)분위-(5~10)분위

(단위: %p)



주: 1) 소비비중 격차는 소득 1~4분위의 비중에서 5~10분위 비중을 뺀 값으로 산출함.
 2)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전 및 가전용기기, 가사용품 등을,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이머용서비스, 위생 및 이머용용품, 기타개인용품, 보험, 기타 금융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나. 소비 영향 분석

본 절에서는 경제여건의 변화가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분석은 가계동향조사를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여, 가구집단별 소비지출 비중 및 증가율 등을 총량과 소비품목별 등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최근의 경기순환주기에 속하는 2015~2019년의 5년간으로 하였고, 2017년 가계동향조사 개편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경기 확장기는 2015~2016년으로, 수축기는 2018~2019년으로 하였다. 가구간 비교가 아닌 증가율 등 지표 자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기간 중 물가효과를 제거해야 해서 소비자물가지수로 산출한 불변가격 자료를 이용하였다.

아래의 [그림 2-8]은 2015~2019년 중 아동가구(G1~G3)와 무자녀가구(G4)의 월평균 가계지출¹⁷⁾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모든 기간에서 아동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간 중 아동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평균 76.7%로, 무자녀가구 75.1% 대비 1.6%p 높다. 또한, 경기 확장기인 2015~2016년 아동가구 소비지출 비중은 평균 77.0%로 무자녀가구 74.9% 대비 2.1%p 높고, 수축기인 2018~2019년은 75.8%로 무자녀가구 74.6% 대비 1.2%p 높다. 이를 통해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아동가구의 소비성향이 무자녀가구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 수축기에는 아동가구와 무자녀가구간 소비지출 비중의 격차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 확장기와 수축기를 비교하면, 무자녀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0.3%p(74.9%→74.6%) 하락한데 반해, 아동가구는 1.2%p(77.0%→75.8%)로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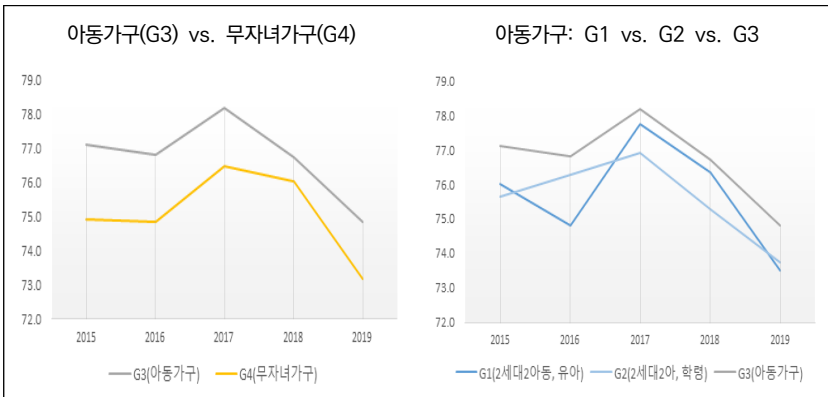
17)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계금액으로, 비소비지출에는 연금·사회보험료·경상조세·이자비용·가구간이전지출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이 무자녀가구 보다 경제여건 변화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아동가구내 집단을 비교하면, 2016년을 제외하면 2세대2아동가구 중 영유아가가구의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경기 확장기인 2015~2016년에 학령기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확대된 반면, 영유아가가구는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다. 경기 수축기에는 유아기 및 학령기가구 모두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다.

[그림 2-8] 가구 집단별 소비지출 비중 추이: 2015~2019년, 가계지출 기준

(단위: %)



주: 가계지출금액 중 소비지출금액의 비중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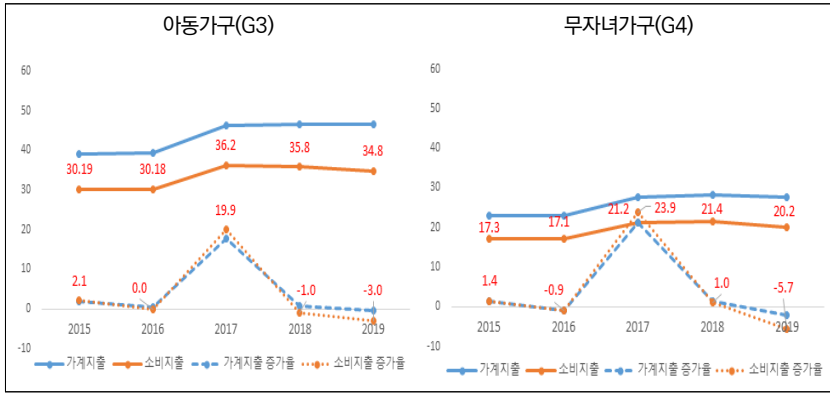
2015~2019년 소비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8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이 무자녀가구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 확장기 중 2015년 아동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2.1%)이 무자녀가구의 증가율(1.4%) 대비 높았고, 경기 수축기 중 2019년 아동가구의 소비지출 감소율(-3.0%)이 무자녀가구의 감소율(-5.7%) 대비 작았다. 다만, 경기 확장기인 2016년에 아동가구와 무자녀가구 모두에서

50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전년대비 소비지출이 감소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유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아동가구의 감소율(-0.04%)이 무자녀가구의 감소율(-0.9%) 보다 작았다¹⁸⁾. 이러한 점들은 경제여건이 개선될 때 아동가구에서 소비지출의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반대로 악화 시에는 소비지출의 감소가 보다 작은 것으로, 아동가구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2-9] 가구 집단별 지출액 및 증가율 추이: 2015~2019년

(단위: 십만 원, %)



주: 1) 모든 지출금액은 대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이용하여 불변화한 값임.
2) 증가율은 전년대비 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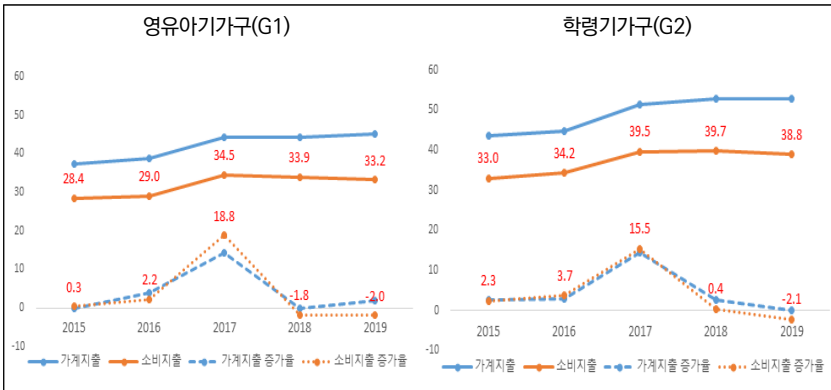
아동가구 중 2세대2아동가구의 영유아기가구(G1)와 학령기가구(G2)의 2015~2019년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추이를 보면, 전 기간에서 영유아기가구 대비 학령기가구의 규모가 큰데, 아동가구(G3) 대비 영유아기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작은 반면, 학령기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크다. 이는 학령기 아동에서 교육비 등 양육비용이 보다 큰 것을 반영한다.

18) 2018년 아동가구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감소(-1.0%)했으나, 무자녀가구 는 증가(1.0%)하였다.

2세대2아동가구의 경우 대체로 소비 증가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데, 경기 확장기인 2015~2016년 영유아기가구는 0.3~2.2% 증가하였고, 학령기가구는 2~3%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학령기가구의 소비 증가율이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경기 수축기인 2018~2019년의 경우 영유아기가구 소비는 2018년 감소(-1.8%) 후 2019년 감소폭(-2.0%) 확대된 반면, 학령기가구는 2018년 소폭 증가(0.4%)한 후에 2019년 감소(-2.1%)한 것으로 나타난다. 2세대2아동가구의 경우 특히 2019년 소비 감소가 다른 가구 집단(G3, G4) 보다 완만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2세대2아동가구의 소비성향이 전체 아동가구나 무자녀가구 대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2-10] 2세대2아동가구의 지출액 및 증가율 추이: 2015~2019년

(단위: 십만 원, %)



주: 1) 모든 지출금액은 매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이용하여 불변화한 값임.

2) 증가율은 전년대비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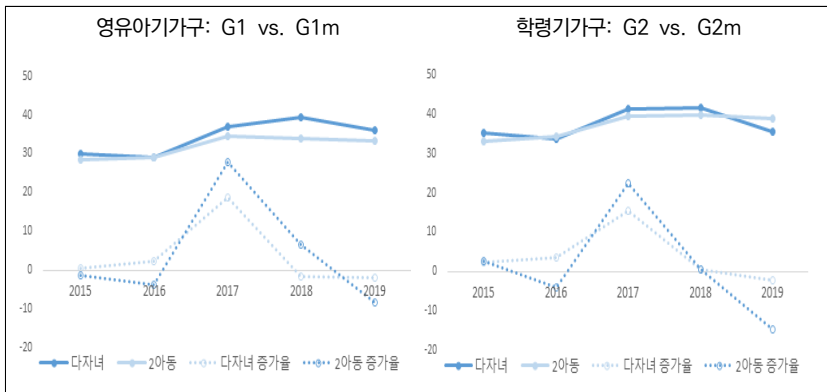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아동가구 중 2세대2아동가구와 2세대다자녀가구의 소비지출을 비교하면, 2아동가구 보다는 다자녀가구, 영유아기가구 보다는 학령기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아래 [그림 2-11]의 ‘실선’)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아동가구 보다 다자녀가구의 소비지출 변동성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2015~2019년 다자녀가구의 소비증가율 변동범위가 2아동가구에 비해 넓고, 2아동가구는 영유아기가구와 학령기가구 모두에서 2016년 소비지출이 전년대비 2~3%대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다자녀가구는 -3~-4%대의 감소세를 보였다(그림의 ‘점선’ 부분). 따라서 다자녀가구가 2아동가구 대비 소비자출 규모가 크고 불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영유아기가구와 학령기가구를 비교하면, 학령기가구의 소비지출 규모가 다소 큰 가운데, 소비 증가율의 변동폭이 영유아기가구 대비 작아서 소비지출의 경직성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1] 2세대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액 및 증가율 추이 비교: 2아동 vs. 다자녀

(단위: 십만 원, %)



주: 1) 모든 지출금액은 매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이용하여 불변화한 값임.

2) 증가율은 전년대비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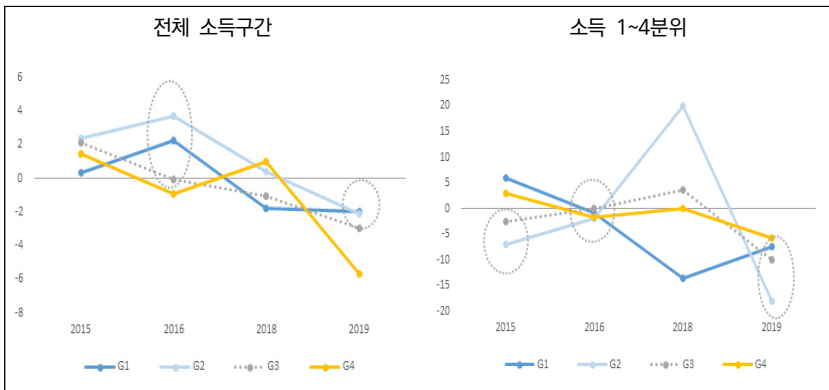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가구 집단별 소득 1~4분위 소비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전체 소득구간 보다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여건에 따라 전체 소득구간의 소비지출이 -5~3%대 범위에서 증감하는데 반해, 소득 1~4분위는 -18~20%대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경기 회복기인 2015~2016년에 전체 소득구간의 아동가구 소비는 증가세인 반면, 소득 1~4분위 아동가구는 2세대2아동 학령기 가구(G2)를 중심으로 감소세에 있다(단, 2015년 2세대2아동 영유아기 가구(G1) 제외). 경기 수축기인 2018~2019년은 소득 1~4분위의 소비 감소세가 큰 폭으로 나타난다(단, 2018년 2세대2아동 학령기가구 제외). 특히, 2015~2019년 중 전체 소득구간의 경우 2세대2아동 학령기가구의 소비 증가율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며 영유아기가구 보다 높은 반면, 소득 1~4분위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2018년 제외) 하였다.

[그림 2-12] 가구 집단별·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2015~2019년

(단위: %)



주: 1) 지출금액은 모두 매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이용하여 불변화한 값임.

2)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 저자 분석.

아래에서는 보다 상세한 소비 영향 분석을 위해 경기 확장기인 2015~2017년 중 2016년과 경기 수축기인 2018~2019년 중 2019년에 한하여, 2세대2아동가구(G1,G2)의 품목별 전년대비 소비 증가율을 무자녀가구(G4)와 비교하였다.

2016년 2세대2아동 영유아가가구(G1)와 학령기가구(G2)의 소비 증가율은 2~3% 후반대인 반면, 무자녀가구(G4)는 0.9%의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품목별로, 2016년 2세대2아동가구는 교육,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주류·담배, 음식·숙박의 소비가 증가한 반면, 무자녀가구는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주류·담배가 증가하였다. 특히, 영유아가가구는 교육 증가율이 가장 크고 오락·문화는 감소했는데, 무자녀가구는 반대로 오락·문화의 증가율이 가장 크고 교육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2016년 소득 1~4분위의 2세대2아동 유아기 및 학령기가구와 무자녀가구의 소비는 각각 0.8%, 1.93%, 1.69%의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2세대2아동가구는 전체 소득구간 대비 소비 감소폭이 커지거나 소비 감소 품목이 확대되었다. 영유아가가구는 주류·담배 소비가 증가하며 음식·숙박이 감소하였고, 학령기가구는 반대로 주류·담배가 감소하며 음식·숙박이 증가하였다. 영유아가가구는 전체 소득구간과 같이 소득 1~4분위에서 교육과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의 소비 증가율은 높았으나, 음식·숙박과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식료품·비주류음료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소득 1~4분위의 교육, 주류·담배 증가율은 40~90%대로 큰 반면, 교통과 오락·문화, 보건 등 증가율은 -10~-20% 후반대로, 감소세가 컸다. 학령기가구는 전체 소득구간의 경우 전 품목의 소비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소득 1~4분위는 주류·담배, 교통,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오락·문화 등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무자녀가구에서는 교육과 기타 상품 및 서비스에서 감소세가 컸다.

(표 2-8) 가구집단별 · 소비품목별 소비증가율 비교(2016년): G1 vs. G2 vs. G4

(단위: %)

G1(2.23)		G2(3.69)		G4(-0.92)	
품목	증가율	품목	증가율	품목	증가율
교육	26.1	가정용품·가사서비스	8.2	오락·문화	6.5
주류·담배	12.2	교육	6.9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3
음식·숙박	5.5	기타 상품 및 서비스	4.7	보건	3.6
주거·수도·광열	5.0	교통	4.4	주류·담배	2.7
기타 상품 및 서비스	4.1	주류·담배	3.6	음식·숙박	1.9
식료품·비주류음료	2.0	음식·숙박	3.5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3
의류·신발	-0.8	오락·문화	3.4	주거·수도·광열	-0.9
통신	-2.2	식료품·비주류음료	2.7	식료품·비주류음료	-1.1
오락·문화	-3.2	통신	2.5	의류·신발	-1.6
교통	-4.7	보건	2.4	통신	-2.2
보건	-7.3	주거·수도·광열	1.1	교통	-6.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9.6	의류·신발	0.7	교육	-9.5
G1, 1~4분위(-0.80)		G2, 1~4분위(-1.93)		G4, 1~4분위(-1.69)	
교육	90.6	교육	18.9	오락·문화	4.7
주류·담배	49.0	음식·숙박	6.2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6
주거·수도·광열	10.7	의류·신발	4.9	주류·담배	1.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2	통신	0.5	주거·수도·광열	1.1
의류·신발	0.2	주거·수도·광열	0.4	의류·신발	0.5
통신	-2.7	식료품·비주류음료	-1.1	음식·숙박	-0.2
식료품·비주류음료	-3.8	오락·문화	-10.2	통신	-0.6
기타 상품 및 서비스	-6.6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1.1	보건	-0.9
보건	-14.2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8.8	식료품·비주류음료	-1.5
오락·문화	-19.1	보건	-26.8	교통	-3.6
음식·숙박	-20.0	교통	-28.7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1.2
교통	-29.6	주류·담배	-34.1	교육	-18.9

주: ()는 집단별 전체가구의 전년대비 증가율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6), 저자 분석.

2019년은 모든 집단의 소비가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는데, 2세대 2아동가구(G1,G2)는 1% 후반~2%대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고, 무자녀가구(G4)는 5.7%로 크게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2세대2아동 가구는 교육과 기타 상품 및 서비스에서 여전히 증가세가 큰 반면, 교통¹⁹⁾, 통신, 의류·신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에서 감소하였다. 이외 2세대 2아동의 영유아가가구는 주거·수도·광열이 감소하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증가한 반면, 학령기가구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감소하고 주거·수도·광열이 증가하였다. 무자녀가구는 여전히 보건의 증가세가 높은 가운데 경기확장기인 2016년 감소세를 보인 교육과 기타 상품 및 서비스가 증가한 반면, 증가세를 보인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주류·담배는 감소세를 보였다. 아동의 연령대가 높고 자녀가 없는 경우 경기 수축기에 소비감소가 나타나는 품목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소득 1~4분위의 경우 2019년 2세대2아동가구(G1, G2)와 무자녀가구(G4)의 소비 증가율은 각각 7.5%, 18.0%, 5.6%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감소세는 무자녀가구 보다 아동가구에서 컸는데, 특히 2세대2아동의 학령기가구에서 감소세가 컸다. 이는 앞서 2016년의 소득 1~4분위에서와 같은 모습이다. 다만, 경기수축기인 2019년에는 무자녀가구보다 2세대2아동의 영유아가가구의 감소폭이 커서, 전체적으로 경기수축기에 아동가구가 무자녀가구 대비 소비 감소세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19) 2019년 모든 집단에서 '교통' 소비가 감소했는데, 이는 2017년 자동차 소비 급증의 기저 효과, 2018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2019년 경기후퇴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표 2-9) 가구집단별 · 소비품목별 소비증가율 비교(2019년): G1 vs. G2 vs. G4

(단위: %)

G1(-1.97)		G2(-2.14)		G4(-5.68)	
품목	증가율	품목	증가율	품목	증가율
교육	22.3	교육	21.9	보건	6.4
가정용품·가사서비스	9.0	주류·담배	13.4	기타 상품 및 서비스	5.3
보건	8.6	기타 상품 및 서비스	9.1	교육	3.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6.5	주거·수도·광열	0.7	주류·담배	-0.1
주류·담배	4.3	음식·숙박	-0.6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9
오락·문화	1.0	오락·문화	-4.1	주거·수도·광열	-2.6
음식·숙박	-0.7	보건	-4.6	음식·숙박	-3.8
식료품·비주류음료	-2.6	식료품·비주류음료	-5.1	오락·문화	-8.3
의류·신발	-5.8	통신	-5.5	통신	-9.8
통신	-11.7	의류·신발	-8.4	의류·신발	-11.3
교통	-15.7	가정용품·가사서비스	-9.8	식료품·비주류음료	-12.3
주거·수도·광열	-15.8	교통	-29.0	교통	-14.2
G1, 1~4분위(-7.46)		G2, 1~4분위(-17.97)		G4, 1~4분위(-5.64)	
교육	78.9	주류·담배	16.4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1.0
주류·담배	32.1	교육	9.6	보건	10.7
오락·문화	26.4	식료품·비주류음료	5.8	주류·담배	3.8
기타 상품 및 서비스	-2.6	오락·문화	-0.5	기타 상품 및 서비스	2.5
보건	-2.9	통신	-13.8	음식·숙박	-1.7
식료품·비주류음료	-9.0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5.4	오락·문화	-5.5
통신	-10.6	음식·숙박	-20.7	주거·수도·광열	-8.3
주거·수도·광열	-17.6	주거·수도·광열	-26.9	통신	-9.0
음식·숙박	-19.3	교통	-34.2	식료품·비주류음료	-12.2
교통	-22.5	의류·신발	-35.0	교육	-13.1
의류·신발	-22.9	가정용품·가사서비스	-52.6	의류·신발	-13.8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1.8	보건	-52.8	교통	-14.7

주: ()는 집단별 전체가구의 전년대비 증가율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8~2019), 저자 분석.

2. 소득 영향

본 절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1차~14차 웨이브(2016~2019년, 이하 ‘복지패널’)를 이용하여²⁰⁾, 2015~2018년의 아동가구의 소득여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복지패널의 가구소득은 1차소득(primary income)과 경상소득(혹은 총소득, gross income),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으로 구분하였다. 1차소득은 총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의 합계금액이다.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사회보장 부담금, 소득세, 기타 조세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소득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경상소득은 1차소득 대비 크고,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 대비 작게 된다. 각 소득에 대해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가구당 구매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균등화소득을 각각 산출하였다. 균등화소득은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일종의 규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반영하는데,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그리고 각 소득에 대해 복지패널의 표본가중치²¹⁾를 적용하여 소득 구간을 10분위로 구분하였고, 마찬가지로 동 가중치를 평균과 중위값 등 소득 관련 기초 통계량 계산에 적용하였다.

가구유형은 전체가구와 이를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 유무에 따라 구분한 아동가구와 무자녀가구로 구분하였다. 이외 필요한 경우 아동 중만 7세 이하를 포함하는 가구를 영유아가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취약 계층으로 고유 특성을 갖는 복지패널 자료상의 한부모가구와 장애가구를 구분하였다.

20) 2020년 조사된 2019년 자료는 연구 시점에서 발표되지 않아 포함되지 못하였다.

21) 횡단면 데이터 및 종단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표준 가중치이다(복지패널 코드 ‘h14_ws’).

가. 기초분석

복지패널의 전체가구는 소멸가구 발생 등으로 2015년 6,723가구에서 2018년 6,331가구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가구도 1,582가구에서 1,270가구로 감소하며, 전체가구 내 비중이 23.5%에서 20.1%로 하락하였다. 영유아가구는 597가구에서 461가구로 감소하였고, 비중은 37.7%에서 36.3%로 하락하였다.

가구당 아동수는 2명이 45.0~47.5%로 가장 많았고, 1명이 42.5~44.9%, 3명 8.6~9.0% 등이다. 영유아가구수는 아동수가 많아질수록 감소하여, 1명이 25.5~27.0%, 2명 9.4~11.2%, 3명 0.9% 등이다. 무자녀가구는 2015년 5,141가구에서 2018년 5,061가구로 감소했는데, 가구내 비중은 76.5%에서 79.9%로 높아졌다.

〈표 2-10〉 한국복지패널의 가구 현황: 2015~2018년

(단위: 가구,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전체가구	6,723	100.0	6,581	100.0	6,474	100.0	6,331	100.0
아동가구	1,582	23.5	1,486	22.6	1,376	21.2	1,270	20.1
아동수								
1명	673	42.5	659	44.3	618	44.9	557	43.9
2명	751	47.5	676	45.5	619	45.0	591	46.5
3명	139	8.8	133	9.0	124	9.0	109	8.6
4명	17	1.1	16	1.1	12	0.9	10	0.8
5명	2	0.1	2	0.1	3	0.2	3	0.2
7세미만								
1명	406	25.7	401	27.0	360	26.2	324	25.5
2명	177	11.2	149	9.4	142	10.3	125	9.8
3명	14	0.9	15	0.9	13	0.9	12	0.9
합계	597	37.7	565	37.4	515	37.4	461	36.3
무자녀	5,141	76.5	5,095	77.4	5,098	78.75	5,061	79.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복지패널에서 한부모가구와 장애가구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한부모가구는 2015년 123가구에서 조사가구 수가 감소하며 2018년 73가구로 감소하였고, 전체가구 내 비중은 1.83%에서 1.15%로 하락하였다. 한부모가구 중 아동가구는 2015년 89가구에서 2018년 57가구로 감소했는데, 한부모가구 중 아동가구의 비중은 72.4%에서 78.1%로 높아졌다. 기간 중 아동수가 1명인 한부모가구가 44.7%~54.5%로 가장 많았고, 2명인 경우가 22.5~26.0%이다. 아동수가 3명이 한부모가구도 2%대로 존재하고, 드물지만 2015~2016년 자료에는 아동수가 4명인 한부모가구가 1가구 존재하였다. 한부모가구 중 영유아가구는 많지 않아, 2015~2018년 중 2~6가구 정도이고, 아동수는 대체로 1명이 많은데 2018년에는 2명 가구도 3가구로 많아졌다.

장애가구는 2015년 28가구에서 2018년 20가구로 감소했는데, 전체 가구 내 비중은 0.42%에서 0.32%로 하락하였다. 대체로 아동 1~2명인 장애가구 수가 많은데, 3명인 장애가구 수도 3~4가구 포함되고, 4명인 장애가구도 1가구 있다. 장애 아동가구 중 영유아가구는 기간 중 5~6가구 있는데, 대체로 1명인 경우가 많다.

〈표 2-11〉 한국복지패널의 가구 현황: 2015~2018년, 한부모·장애 가구

(단위: 가구,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전체가구	6,723	100.0	6,581	100.0	6,474	100.0	6,331	100.0
<한부모>	123	1.83	120	1.82	88	1.36	73	1.15
아동가구								
1명	55	44.7	57	47.5	48	54.5	36	49.3
2명	30	24.4	27	22.5	20	22.7	19	26.0
3명	3	2.4	3	2.5	3	3.4	2	2.7
4명	1	0.8	1	0.8	0	0.0	0	0.0
합계	89	72.4	88	73.3	71	80.7	57	78.1
7세미만								
1명	2	1.6	5	4.2	1	1.1	1	1.4
2명	0	0.0	1	0.8	1	1.1	3	4.1
합계	2	1.6	6	5.0	2	2.3	4	5.5
<장애>	28	0.42	21	0.32	21	0.32	20	0.32
아동가구								
1명	12	42.9	6	28.6	6	28.6	5	25.0
2명	11	39.3	11	52.4	10	47.6	10	50.0
3명	4	14.3	3	14.3	4	19.0	4	20.0
4명	1	3.6	1	4.8	1	4.8	1	5.0
합계	28	0.42	21	0.32	21	0.32	20	0.32
7세미만								
1명	5	17.9	6	28.6	4	19.0	3	15.0
2명	0	0.0	1	4.8	2	9.5	2	10.0
3명	1	3.6	0	0.0	0	0.0	0	0.0
합계	6	21.4	7	33.3	6	28.6	5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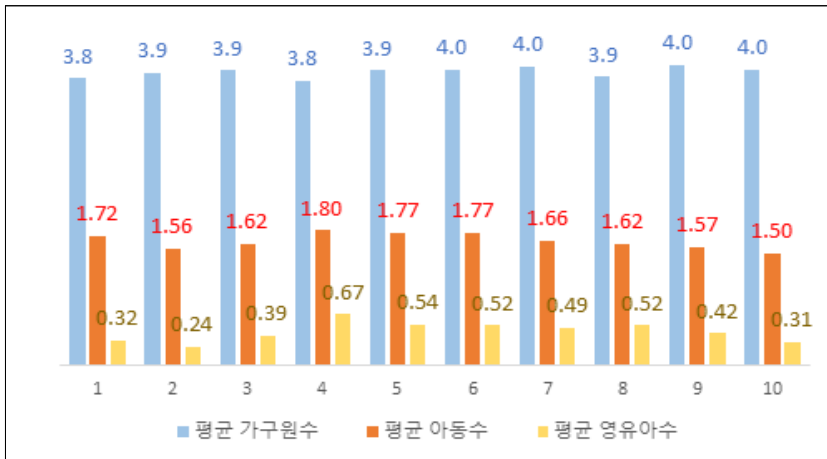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2018년 균등화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10분위별 평균 가구원수와 아동수, 유아동수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가구원수는 소득분위별로 3.8~4.0명인데, 대체로 상위구간에

다소 많은 모습이다. 평균 아동수는 소득분위별로 1.5~1.8명 수준인데, 소득 1분위와 4~6분위에 상대적으로 많고, 2분위와 10분위에서 다소 적다. 평균 영유아수는 소득분위별로 0.2~0.7명 수준인데, 소득 4~5분위에 상대적으로 많고, 소득 1~2분위와 10분위에 적다.

[그림 2-13] 소득분위별 가구원수 및 아동수 등 분포: 2018년 평균 기준

(단위: 명)



주: 균등화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2018년 한부모²²⁾ 아동가구는 총 57가구로, 전체 아동가구 1,270가구의 4.5%이다. 1차소득 기준으로 한부모 아동가구는 소득 4분위에 가장 많고, 이외 소득 3분위와 5~7분위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 2~5분위에 집중되는데, 이는 앞의 [그림 2-13]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 4분위의 평균 아동수가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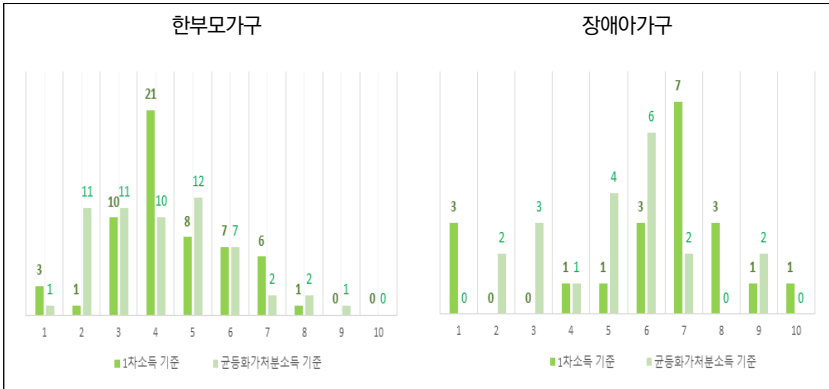
22) 모자 혹은 부자 가구에 해당된다.

소득분위 대비 많아 균등화소득 환산시 소득 감소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가구는 총 20가구로, 전체 아동가구의 1.6%이다. 1차소득 기준으로 소득 7분위에 7가구로 가장 많고, 이외 소득 1분위와 6·8분위에 각각 3가구씩 분포한다.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 5~6분위에 4가구와 6가구로 상대적으로 많다. 1차소득 기준으로 소득 1분위의 3가구가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0가구로 되는데, 이는 장애가구에 대한 이전소득의 효과로 보여진다. 1차소득 기준으로 소득 2~3분위에 장애가구가 0가구였는데,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각각 2가구, 3가구로 많아진다.

[그림 2-14] 소득분위별 한부모가구 및 장애가구 분포: 2018년 기준

(단위: 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아래에서는 최근 2018년을 기준으로 소득유형별로 아동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분포상 특징과 소득유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소득은 경제여건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사적·공적 이전소득의 효과가 배제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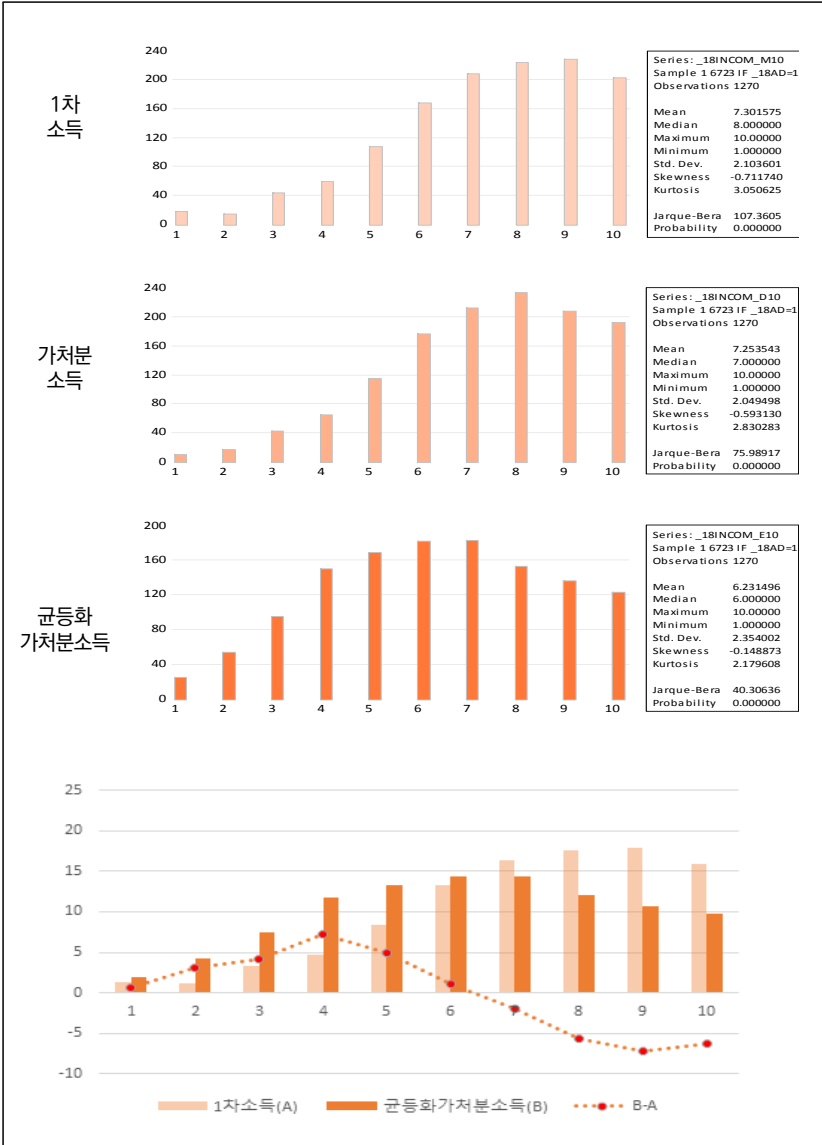
‘1차소득’과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하여 구매력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가구원수 효과를 감안한 ‘균등화 가처분소득’으로 하였다.

우선, 아동가구(아래 [그림 2-15] 참조)는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구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1차소득 기준으로 소득 7~9분위에 분위별 200가구를 초과하는 아동가구(전체 아동가구의 52.0%)가 집중되어 있다. 이전소득과 부담금 및 조세 등 비소비지출 효과를 제거한 가처분소득에서는 소득 9~10분위 아동가구수가 다소 감소하여 소득 8분위에 집중되고, 소득 1~2분위도 다소 작아지는 모습이다. 가구원수를 반영한 균등화가처분소득은 소득 8~10분위 아동가구 수 비중이 크게 줄고 나머지 소득구간(특히, 소득 4~6분위)의 아동가구수가 증가한다. 이는 균등화 소득의 정의상 소득 8~10분위에 다른 소득구간 대비 상대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효과가 반영되며 소득 1~6분위 비중도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득 1~6분위(특히 소득 2~5분위)는 1차소득 대비 균등화가처분소득의 아동가구수가 많아진 반면, 소득 7~10분위(특히, 소득 8~10분위)에서는 작아졌다.

무자녀가구(아래 [그림 2-16] 참조)는 저소득구간인 소득 1~3분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가처분소득과 균등화가처분소득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이전소득과 가구원효과가 소득분위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소득 1~5분위까지는 1차소득 대비 균등화가처분 소득 기준 무자녀가구수가 다소 감소하는 반면, 6~10분위에서는 다소 증가한다.

[그림 2-15] 소득유형별 소득분포 비교: 아동가구, 2018년 기준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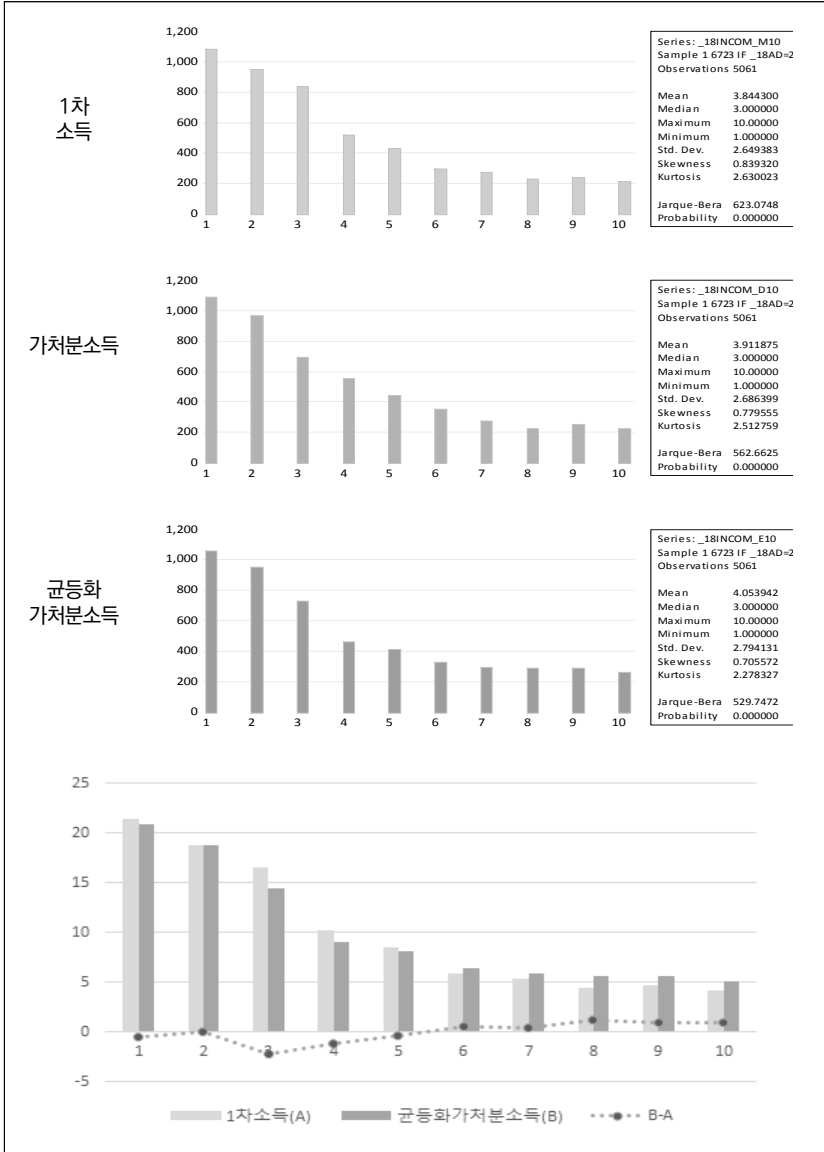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66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그림 2-16] 소득유형별 소득분포 비교: 무자녀가구, 2018년 기준

(단위: 가구,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가. 가구소득의 변화 분석

전체가구 기준으로 최근 2018년 평균소득을 보면, 시장소득의 성격을 갖는 1차 소득은 4,501만원이고, 경상소득은 1차소득 대비 19.0% 많은 5,355만원,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10.0% 감소한 4,818만원이다. 2015~2018년 전체가구의 소득흐름을 보면, 대체로 2016년에 감소세 혹은 증가세가 둔화된 후에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제여건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1차소득은 2016년 전년대비 0.7% 감소하였고, 이전 소득 효과로 경상소득은 0.1% 증가했으나, 가처분소득은 0.4% 감소하였다. 2017년은 소득별로 모두 2.6~3.2%대에서 증가하였고, 2018년은 증가율이 보다 높아져 3.1~3.4%를 보였다.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임금인상률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2017년 이후 경기국면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면, 2016년 소득 부진은 이전 시기의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017~2018년 소득증가는 이전 시기의 경기확장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소득은 증가세가 보다 크게 나타나, 2016년에도 균등화 1차소득과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1~2%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동가구의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대비 큰데, 2018년 기준 1차소득이 7,175만원으로 전체가구의 1.59배이고, 경상소득은 1차소득 대비 9.1% 많은 7,825만원으로 전체가구의 1.46배,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 대비 11.9% 작은 6,893만원으로 전체가구의 1.43배이다. 가구원수를 감안한 균등화소득에서는 이러한 상대적 소득규모의 차이가 다소간 작아져, 아동가구의 평균소득이 전체가구 대비 1.2~1.3배 크다. 2015~2018년 아동가구의 소득흐름을 보면, 소득이 부진한 2016년에는 소득 감소세가 보다 커서 1차소득 및 경상소득은 7%대, 가처분소득은 9%대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에도 전체가구의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1~2%대를 보인 후 2018년에는 4~5%대로 전체가구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아동가구가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의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즉, 아동가구의 경우 경기부진시 상대적으로 소득감소가 큰 반면, 경기확장기에는 소득증가가 보다 크게 나타난다.

아동가구 소득의 이러한 특징은 아동이 없는 무자녀가구와 비교 시 보다 잘 나타난다. 아래의 <표 2-12>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이 부진했던 2016년에 아동가구의 경우 세 가지 소득 중 가처분소득의 감소세(-9.2%)가 가장 컸던 반면, 무자녀가구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세(6.5%)가 가장 크다. 반대로 소득이 증가한 2018년 아동가구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세가 가장 컸던 반면, 무자녀가구는 가장 작았다. 이는 가처분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소비지출이 아동가구의 경우 경기에 비탄력적인데 반해 무자녀가구는 보다 탄력적임을 보여준다.

〈표 2-12〉 복지패널의 평균소득 분포 및 추이: 가구유형별·소득유형별, 2015~2018년
(단위: 만 원, %, 배)

구 분		1차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균등화		
					1차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전체 가구	2015	4,259 (-) [1.00]	5,025 (-) [1.00]	4,568 (-) [1.00]	2,497 (-) [1.00]	3,037 (-) [1.00]	2,768 (-) [1.00]
	2016	4,229 (-0.7) [1.00]	5,032 (0.1) [1.00]	4,549 (-0.4) [1.00]	2,544 (1.9) [1.00]	3,112 (2.5) [1.00]	2,827 (2.1) [1.00]
	2017	4,354 (2.9) [1.00]	5,194 (3.2) [1.00]	4,666 (2.6) [1.00]	2,644 (3.9) [1.00]	3,240 (4.1) [1.00]	2,925 (3.5) [1.00]
	2018	4,501 (3.4) [1.00]	5,355 (3.1) [1.00]	4,818 (3.3) [1.00]	2,742 (3.7) [1.00]	3,359 (3.7) [1.00]	3,035 (3.7) [1.00]
아동 가구	2015	7,265 (-) [1.71]	7,892 (-) [1.57]	7,129 (-) [1.56]	3,618 (-) [1.45]	3,937 (-) [1.30]	3,551 (-) [1.28]
	2016	6,725 (-7.4) [1.59]	7,339 (-7.0) [1.46]	6,470 (-9.2) [1.42]	3,406 (-5.9) [1.34]	3,720 (-5.5) [1.20]	3,284 (-7.5) [1.16]
	2017	6,850 (1.9) [1.57]	7,517 (2.4) [1.45]	6,553 (1.3) [1.40]	3,508 (3.0) [1.33]	3,849 (3.5) [1.19]	3,358 (2.2) [1.15]
	2018	7,175 (4.7) [1.590]	7,825 (4.1) [1.46]	6,893 (5.2) [1.43]	3,676 (4.8) [1.34]	4,012 (4.2) [1.19]	3,532 (5.2) [1.16]
무자녀 가구	2015	3,188 (-) [0.75]	4,004 (-) [0.80]	3,656 (-) [0.80]	2,098 (-) [0.84]	2,717 (-) [0.89]	2,489 (-) [0.90]
	2016	3,379 (6.0) [0.80]	4,246 (6.1) [0.84]	3,895 (6.5) [0.86]	2,250 (7.3) [0.88]	2,905 (6.9) [0.93]	2,672 (7.3) [0.94]
	2017	3,561 (5.4) [0.82]	4,455 (4.9) [0.86]	4,066 (4.4) [0.87]	2,370 (5.3) [0.90]	3,046 (4.9) [0.94]	2,788 (4.4) [0.95]
	2018	3,714 (4.3) [0.83]	4,628 (3.9) [0.86]	4,208 (3.5) [0.87]	2,467 (4.1) [0.90]	3,167 (4.0) [0.94]	2,889 (3.6) [0.95]

주: 1) 평균소득은 복지패널의 패널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2) 균등화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임.

3) ()는 전년대비 증가율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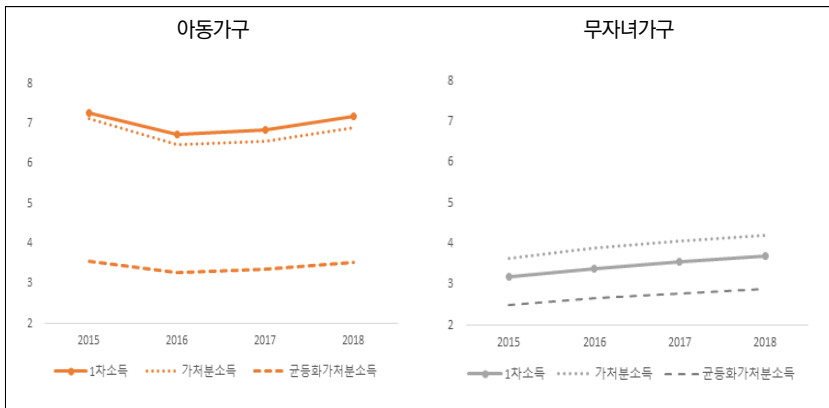
4) []는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해당 가구소득의 배수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1차소득과 가처분소득, 균등화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아동가구와 무자녀가구간 소득 수준 및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17]과 같다. 2015~ 2018년 중 아동가구의 1차소득과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6~7천만원으로 무자녀가구의 3~4천만 원 대비 1.6~2.3배인데, 균등화가처분소득은 3천만 원대로 2천만 원대인 무자녀가구 소득의 1.2~1.4배로 격차가 작아진다.

[그림 2-17] 가구 집단별 소득 추이 비교: 2015~2018년 평균

(단위: 천만 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나. 아동가구의 빈곤화 영향

복지패널의 중위소득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15년 3,629만원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18년 4,108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균등화가처분소득은 2,359만원에서 2,695만으로 높아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소득은 2016년에 전년대비 감소 혹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중위소득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2016년 저소득 구간의 소득 증가세가 고소득 구간 대비 낮았거나 소득 감소세가 컸음을 시사한다. 평균 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비율은 '1'이하의 값으로 저소득 구간에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음을 반영하는데, 2015년 0.76~0.85에서 매해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8년 0.82~0.89로 저소득 구간에서 상대적인 소득개선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3〉 복지패널의 중위소득 추이: 소득유형별, 2015~2018년

(단위: 만원, %, 배)

구 분	1차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균등화		
				1차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5	3,255	3,943	3,629	2,025	2,552	2,359
	(-)	(-)	(-)	(-)	(-)	(-)
	[0.76]	[0.78]	[0.79]	[0.81]	[0.84]	[0.85]
2016	3,353	4,096	3,772	2,200	2,686	2,481
	(3.0)	(3.9)	(3.9)	(8.7)	(5.2)	(5.2)
	[0.79]	[0.81]	[0.83]	[0.86]	[0.86]	[0.88]
2017	3,569	4,291	3,941	2,350	2,848	2,633
	(6.4)	(4.7)	(4.5)	(6.8)	(6.0)	(6.1)
	[0.82]	[0.83]	[0.84]	[0.89]	[0.88]	[0.90]
2018	3,700	4,503	4,108	2,426	2,928	2,695
	(3.7)	(5.0)	(4.2)	(3.2)	(2.8)	(2.3)
	[0.82]	[0.84]	[0.85]	[0.88]	[0.87]	[0.89]

주: 1) 중위소득은 복지패널의 패널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2) 균등화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당 구매력을 반영

3) ()는 전년대비 증가율 값임.

4) []는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배수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아래의 〈표 2-14〉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선(base line)으로 하여 가구유형별로 빈곤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빈곤율은 전체 아동가구 수에서

가구소득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가구 수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복지패널의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단, 복지패널의 표본 가구에서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빈곤율 산출의 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 대신 60%로 하였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2018년 전체가구의 빈곤율은 1차소득 기준 36.6%에서 경상소득 기준 32.0%, 가처분소득 기준 30.8%로 낮아져, 이전소득과 비소비지출로 빈곤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준다. 균등화 소득으로 하면 빈곤율이 보다 낮아져 25.0~33.7%가 되는데, 이는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구간에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함을 의미한다. 균등화소득 기준으로도 1차소득 대비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이 하락하였다.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전체가구 대비 상당히 낮아 2018년 1차소득 기준 7.2%, 경상소득 기준 4.6%, 가처분소득 기준 4.3%이다. 이는 전체가구 빈곤율의 1/5~1/7 수준에 해당한다. 균등화소득으로는 2018년 1차소득 기준 9.6%, 경상소득 7.3%, 가처분소득 7.8%이다. 아동가구의 경우 이전소득과 비소비지출이 빈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는 하나, 2016년과 2017~2018년 균등화소득의 경우 경상소득 기준 대비 가처분소득 기준의 빈곤율이 높아져, 저소득구간 아동가구의 비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무자녀가구의 빈곤율은 2018년 1차소득 기준 45.3%, 경상소득 기준 40.1%, 가처분소득 기준 38.6%로, 아동가구 대비 6~9배 가량 높다. 무자녀 가구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 연령이 지난 자녀와의 동거가족, 낮은 소득의 부부가구나 1인 가구,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동 가구에서는 1차소득에서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낮아지는 패턴이 뚜렷이 나타난다.

2015~2018년 중 추이를 보면, 전체가구와 무자녀가구의 빈곤율은 대체로 1차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에서 하락세를 보인 후 2018년 상승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평균소득에서 볼 수 없었지만,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2018년 경기가 둔화되면서 빈곤선 아래로 이동하는 가구수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구원수를 반영하는 균등화소득에서는 빈곤율이 낮아지며 기간 중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율은 시기별로, 소득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불규칙하고 균등화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기간 중 하락세를 보인다. 또한 다른 가구집단과 달리 균등화 이후 빈곤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표 2-14〉 복지패널가구의 빈곤율 추이: 가구유형별·소득유형별, 2015~2018년

(단위: 만원, %, 배)

구 분	1차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균등화		
				1차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전체가구						
2015	36.9	31.3	30.8	34.9	26.9	26.1
2016	36.2	31.1	30.1	33.9	26.4	25.1
2017	35.9	30.8	29.7	33.9	25.8	25.1
2018	36.6	32.0	30.8	33.7	25.7	25.0
아동가구						
2015	8.6	5.8	5.7	10.7	8.8	8.4
2016	7.2	4.5	4.6	9.8	8.1	8.3
2017	7.3	4.2	3.9	10.0	7.5	8.0
2018	7.2	4.6	4.3	9.6	7.3	7.8
무자녀가구						
2015	47.0	40.4	39.7	43.6	33.4	32.4
2016	46.1	40.1	38.8	42.1	32.6	30.9
2017	45.0	39.2	38.0	41.5	31.6	30.6
2018	45.3	40.1	38.6	40.9	31.1	30.1

주: 1) 빈곤율의 기준선은 중위소득의 60%로 하였음.

2) 빈곤율(%)=(해당 가구의 기준선 미달 가구수/해당 가구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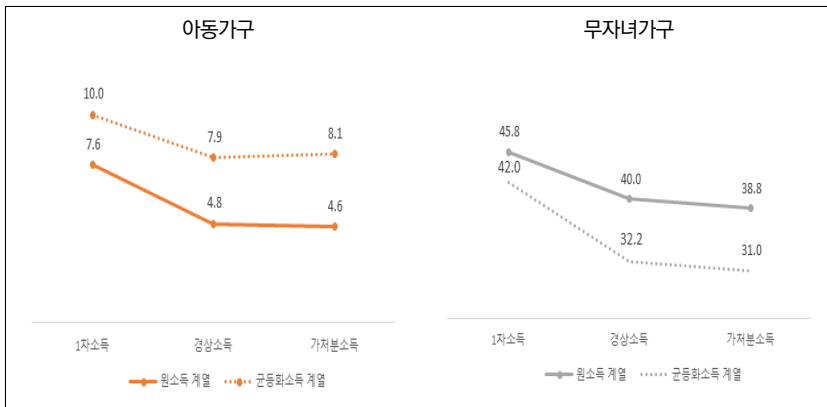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74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가구와 무자녀가구에서는 균등화소득 기준 빈곤율이 낮아진 반면, 아동가구에서는 빈곤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1차소득에서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으로 가면서 균등화소득의 빈곤율 상승폭이 커져, 1차소득에서는 균등화소득의 빈곤율이 원소득계열 대비 2.4%p(=10.0%-7.6%) 높았으나, 경상소득은 3.1%p, 가처분소득은 3.5%p가 높다. 무자녀가구의 경우 이와 패턴이 반대인데, 균등화소득계열의 빈곤율이 낮아지고, 1차소득에서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으로 갈수록 빈곤율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는 아동가구는 무자녀가구와 달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고, 이전소득과 비소비지출이 이러한 부담을 보다 높이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그림 2-18] 가구 집단별 빈곤율 추이 비교: 균등화 효과, 2015~2018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복지패널에서 한부모가구는 2015년 123가구로 전체가구의 1.83%였는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2018년 73가구로 비중이 1.15%로 낮아졌다. 아동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015년 한부모 아동가구는 89가구로 전체 아동가구의 5.6%였는데,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보여 2018년 57가구로 아동가구의 4.5%이다.

한부모가구 중 빈곤가구는 2015년 19가구로 아동 빈곤가구의 17.9%를 차지하는데, 2016~2017년에는 각각 20가구와 17가구로 아동 빈곤가구의 22.0%와 21.0%로 비중이 상승했다. 2018년에는 11가구로 아동 빈곤가구의 15.9%로 낮아졌다. 아동가구 수 기준으로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4~5% 비중인데 비해, 아동 빈곤가구 수 기준으로는 15~22%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득 감소세가 나타난 2016년에 한부모 아동 빈곤가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소득 증가세가 나타난 2018년에는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2-15〉 한부모 가구 및 빈곤가구 추이: 2015~2018년

(단위: 가구,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전체가구	6,723	100.0	6,581	100.0	6,474	100.0	6,331	100.0
- 한부모	123	1.83	120	1.82	88	1.36	73	1.15
아동가구	1,582	23.5	1,486	22.6	1,376	21.2	1,270	20.1
- 한부모	89	5.6	88	5.9	71	5.2	57	4.5
아동빈곤	106	100.0	91	100.0	81	100.0	69	100.0
- 한부모	19	17.9	20	22.0	17	21.0	11	1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다. 아동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소득 영향

1) 공적이전소득 현황 및 추이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2015~2018년의 평균 소득금액과 공적이전소득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가구는 2015년 1,582가구로 전체가구 6,723가구의 23.5%에서 2018년 1,270가구로 전체 6,331가구의 20.1% 수준이다.

〈표 2-16〉 가구 현황 추이: 2015~2018년

(단위: 가구, %)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전체가구	6,723	100.0	6,581	100.0	6,474	100.0	6,331	100.0
아동가구	1,582	23.5	1,486	22.6	1,376	21.2	1,270	2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2015년 기준 아동가구에 대한 ‘전체 사회보장’ 급여²³⁾는 전체 아동가구 1,582가구 중 59.8%인 946가구²⁴⁾에게 가구당 연평균²⁵⁾ 408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이 중 ‘아동부문’ 급여는 연평균 322만원 수준으로, 전체 아동가구의 58.3%에 해당하는 922가구에 지급되었다. 아동부문 급여 중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학비·급식비 지원을 합한 ‘보육관련’ 급여는 837가구(52.9%)에게 연평균 324만원, 한부모수당·장애(아)수당·가정위탁금 등을 합한 ‘취약층’ 급여는 71가구(4.5%)에게 연평균

23) 아동가구에 지급된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급여도 포함된 금액이다.

24) 공적이전소득 항목 중 한 개라도 지급받은 아동가구를 합한 가구수이다.

25) 사회보장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관련 평균금액은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하였다.

159만원, 세금환급형인 자녀장려금은 214가구(13.5%)에게 연평균 67만원 수준이 지급되었다. 이외 생계·주거·교육급여를 합한 '맞춤형'급여가 113가구(7.1%)에게 연평균 679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맞춤형'급여가 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 됨을 감안하면, 광의의 개념에서 볼 때 동급여도 '아동부문' 급여에 포함될 수 있겠다.

소득분위별로 전체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 5~9분위의 수혜가구 비중이 높고 평균 급여액은 소득 4분위와 9분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 소득분위는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사적·공적이전소득 및 비소비 지출이 포함되고, 가구원수 효과도 조정된 소득 기준이다. '맞춤형' 급여는 소득 2~4분위에 집중되고 평균 급여액은 특히 소득 1~3분위에서 높다. '아동부문' 급여는 소득 4~7분위에 수혜가구 비중이 높는데 평균 급여액은 소득 6분위와 8~9분위에서 높다. 이 중 '보육 관련' 급여가 소득 4~7분위의 수혜가구 비중이 높는데, 평균 급여액은 6~7분위에서 높다. '취약층' 급여는 소득 2~3분위에 수혜가구가 집중되고, 평균 급여액은 5분위와 8분위에서 높게 나타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3~6분위에 수혜가구 비중이 높고, 평균 급여액은 1분위와 3분위, 9분위에서 높게 나타난다.

78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표 2-17〉 아동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상세 수혜 현황: 2015년 기준, 소득분위별, 연평균 (단위: 가구, 만원, %)

		평균 소득	전체 사회보장	맞춤형	아동부문			
					보육관련	취약층	자녀장려	
전체	수혜자	3,551	946	113	922	837	71	214
	평균액		[59.8]	[7.1]	[58.3]	[52.9]	[4.5]	[13.5]
			408	679	322	324	159	67
1분위	수혜자	30	26	8	19	19	3	1
	평균액		(2.7)	(7.1)	(2.1)	(2.3)	(4.2)	(0.5)
			390	746	212	197	67	80
2분위	수혜자	1,023	32	32	49	42	21	5
	평균액		(3.4)	(28.3)	(5.3)	(5.0)	(29.6)	(2.3)
			342	814	230	189	143	61
3분위	수혜자	1,396	78	43	95	83	27	35
	평균액		(8.2)	(38.1)	(10.3)	(9.9)	(38.0)	(16.4)
			403	721	293	242	176	85
4분위	수혜자	1,797	103	16	125	110	8	45
	평균액		(10.9)	(14.2)	(13.6)	(13.1)	(11.3)	(21.0)
			478	543	323	331	128	67
5분위	수혜자	2,170	129	6	146	130	6	51
	평균액		(13.6)	(5.3)	(15.8)	(15.5)	(8.5)	(23.8)
			413	432	329	335	212	65
6분위	수혜자	2,543	115	3	129	112	1	40
	평균액		(12.2)	(2.7)	(14.0)	(13.4)	(1.4)	(18.7)
			378	336	347	378	48	59
7분위	수혜자	2,945	138	1	126	115	2	24
	평균액		(14.6)	(0.9)	(13.7)	(13.7)	(2.8)	(11.2)
			367	259	334	350	168	60
8분위	수혜자	3,480	112	2	98	95	1	9
	평균액		(11.8)	(1.8)	(10.6)	(11.4)	(1.4)	(4.2)
			365	76	344	347	288	59
9분위	수혜자	4,201	121	1	80	77	1	4
	평균액		(12.8)	(0.9)	(8.7)	(9.2)	(1.4)	(1.9)
			485	660	339	346	98	84
10분위	수혜자	10,274	92	1	55	54	1	0
	평균액		(9.7)	(0.9)	(6.0)	(6.5)	(1.4)	(0.0)
			399	382	327	328	267	0

주: 1) 소득구간과 평균소득금액은 조사가구의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였고, 나머지는 단순 평균값임.
 2) '전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정부보조금 등을 모두 합한 공적이전소득 금액임.
 3) '맞춤형'은 2015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맞춤형급여의 합계금액임.
 4) '보육관련'은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급식지원, 학비지원의 합계금액임.
 5) '취약층'은 한부모수당, 장애(아)수당, 가정위탁금 등의 합계금액임.
 6) []는 전체 아동가구수 대비 비중값, ()는 해당 급여항목의 전체 수혜자수 대비 비중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차 웨이브), 저자 분석.

2016년 기준 아동가구에 대한 ‘전체 사회보장’ 급여는 전체 아동가구 1,486가구 중 59.0%인 876가구에 가구당 연평균 414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이 중 ‘아동부문’ 급여는 연평균 327만원 수준으로, 전체 아동가구의 57.9%에 해당하는 860가구에 지급되었다. 아동부문 급여 중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학비·급식비 지원을 합한 ‘보육관련’ 급여는 787가구(53.0%)에게 연평균 330만원, 한부모수당·장애(아)수당·가정위탁금 등을 합한 ‘취약층’ 급여는 53가구(3.6%)에게 연평균 151만원, 세금환급형인 자녀장려금은 191가구(12.9%)에게 연평균 72만원 가량 지급되었다. 이외 생계·주거·교육급여를 합한 ‘맞춤형’ 급여가 96가구(6.5%)에게 연평균 737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2016년에는 ‘취약층’ 급여 이외에 다른 공적이전소득에서 2015년 대비 가구당 연평균 수급금액이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맞춤형’ 급여는 2015년 676만원에서 2016년 737만원으로 57.7만원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전체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 5~7분위의 수혜가구 비중이 높고 평균 급여액은 소득 3~4분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맞춤형’ 급여는 수혜가구와 평균 급여액 모두 소득 2~4분위에서 높다. ‘아동부문’ 급여는 소득 5~7분위에 수혜가구 비중이 높고, 평균 급여액은 소득 4분위와 5~7분위에서 높다. 이 중 ‘보육 관련’ 급여가 소득 5~7분위의 수혜가구 비중이 높는데, 평균 급여액은 6~10분위에서 높다. ‘취약층’ 급여는 소득 2~4분위에 수혜가구가 집중되고, 평균 급여액은 5분위와 9분위에서 높게 나타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3~6분위에 수혜가구 비중이 높고, 평균 급여액은 2~4분위와 9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80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표 2-18〉 아동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상세 수혜 현황: 2016년 기준, 소득분위별, 연평균 (단위: 가구, 만원, %)

		평균 소득	전체 사회보장	맞춤형	아동부분			
					보육관련	취약층	자녀장려	
전체	수혜자	3,284	876	96	860	787	53	191
	평균액		[59.0]	[6.5]	[57.9]	[53.0]	[3.6]	[12.9]
1분위	수혜자	-309	16	5	13	12	0	2
	평균액		(1.8)	(5.2)	(1.5)	(1.5)	(0.0)	(1.0)
2분위	수혜자	1,135	58	26	56	45	16	15
	평균액		(6.6)	(27.1)	(6.5)	(5.7)	(30.2)	(7.9)
3분위	수혜자	1,497	99	33	97	81	17	39
	평균액		(11.3)	(34.4)	(11.3)	(10.3)	(32.1)	(20.4)
4분위	수혜자	1,914	100	16	99	89	9	30
	평균액		(11.4)	(16.7)	(11.5)	(11.3)	(17.0)	(15.7)
5분위	수혜자	2,295	154	8	151	136	5	42
	평균액		(17.6)	(8.3)	(17.6)	(17.3)	(9.4)	(22.0)
6분위	수혜자	2,699	122	3	120	109	0	31
	평균액		(13.9)	(3.1)	(14.0)	(13.9)	(0.0)	(16.2)
7분위	수혜자	3,088	107	2	106	99	3	23
	평균액		(12.2)	(2.1)	(12.3)	(12.6)	(5.7)	(12.0)
8분위	수혜자	3,592	96	3	94	93	2	5
	평균액		(11.0)	(3.1)	(10.9)	(11.8)	(3.8)	(2.6)
9분위	수혜자	4,397	73	0	73	72	1	3
	평균액		(8.3)	(0.0)	(8.5)	(9.1)	(1.9)	(1.6)
10분위	수혜자	6,911	51	0	51	51	0	1
	평균액		(5.8)	(0.0)	(5.9)	(6.5)	(0.0)	(0.5)

주: 1) 소득구간과 평균소득금액은 조사가구의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였고, 나머지는 단순 평균값임.
 2) '전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정부보조금 등을 모두 합한 공적이전소득 금액임.
 3) '맞춤형'은 2015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맞춤형급여의 합계금액임.
 4) '보육관련'은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급식지원, 학비지원의 합계금액임.
 5) '취약층'은 한부모수당, 장애(아)수당, 가정위탁금 등의 합계금액임.
 6) []는 전체 아동가구수 대비 비중값, ()는 해당 급여항목의 전체 수혜자수 대비 비중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2차 웨이브), 저자 분석.

2017년 기준 아동가구에 대한 ‘전체 사회보장’ 급여는 전체 아동가구 1,376가구 중 57.6%인 793가구에 가구당 연평균 417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이 중 ‘아동부문’ 급여는 연평균 333만원 수준으로, 전체 아동가구의 56.5%에 해당하는 777가구에 지급되었다. 아동부문 급여 중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학비·급식비 지원을 합한 ‘보육관련’ 급여는 702가구(51.0%)에게 연평균 339만원, 한부모수당·장애(아)수당·가정위탁금 등을 합한 ‘취약층’ 급여는 52가구(3.8%)에게 연평균 166만원, 세금환급형인 자녀장려금은 200가구(14.5%)에게 연평균 62만원 가량 지급되었다. 이외 생계·주거·교육급여를 합한 ‘맞춤형’ 급여가 87가구(6.3%)에게 연평균 715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2017년에는 ‘맞춤형’ 급여와 ‘자녀장려금’ 이외에 다른 공적이전소득에서 2016년 대비 가구당 연평균 수급 금액이 모두 증가했는데, ‘취약층’ 급여는 2016년 151만원에서 2017년 166만원으로 15.7만원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전체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 4~6분위의 수혜가구 비중이 높고 평균 급여액은 소득 2~4분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맞춤형’ 급여는 수혜가구는 소득 2~4분위에서 높고, 평균 급여액은 2~3분위에서 높다. ‘아동부문’ 급여는 소득 4~6분위에 수혜가구 비중이 높고, 평균 급여액은 소득 4분위와 6~7분위, 9분위에서 높다. 이 중 ‘보육 관련’ 급여가 소득 4~6분위의 수혜가구 비중이 높는데, 평균 급여액은 소득 4분위와 7~8분위에서 높다. ‘취약층’ 급여는 소득 2~3분위에 수혜가구가 집중되고, 평균 급여액은 4~5분위와 7분위에서 높게 나타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3~5분위에 수혜가구 비중이 높고, 평균 급여액은 1~3분위와 8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82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표 2-19〉 아동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상세 수혜 현황: 2017년 기준, 소득분위별, 연평균 (단위: 가구, 만원, %)

		평균 소득	전체 사회보장	맞춤형	아동부문			
					보육관련	취약층	자녀장려	
전체	수혜자	3,358	793 [57.6]	87 [6.3]	777 [56.5]	702 [51.0]	52 [3.8]	200 [14.5]
	평균액		417	715	333	339	166	62
1분위	수혜자	-10,154	17 (2.1)	4 (4.6)	16 (2.1)	14 (2.0)	2 (3.8)	4 (2.0)
	평균액		374	578	218	223	0	70
2분위	수혜자	721	58 (7.3)	28 (32.2)	55 (7.1)	43 (6.1)	15 (28.8)	20 (10.0)
	평균액		641	805	243	234	127	70
3분위	수혜자	1,305	76 (9.6)	25 (28.7)	73 (9.4)	64 (9.1)	17 (32.7)	35 (17.5)
	평균액		633	887	323	283	172	72
4분위	수혜자	1,711	117 (14.8)	13 (14.9)	115 (14.8)	101 (14.4)	7 (13.5)	46 (23.0)
	평균액		413	570	341	348	200	58
5분위	수혜자	2,323	121 (15.3)	9 (10.3)	120 (15.4)	100 (14.2)	5 (9.6)	44 (22.0)
	평균액		392	594	337	367	238	58
6분위	수혜자	2,750	106 (13.4)	5 (5.7)	103 (13.3)	96 (13.7)	3 (5.8)	25 (12.5)
	평균액		348	174	341	344	0	66
7분위	수혜자	3,622	94 (11.9)	2 (2.3)	92 (11.8)	87 (12.4)	1 (1.9)	14 (7.0)
	평균액		360	580	349	358	378	48
8분위	수혜자	4,123	88 (11.1)	1 (1.1)	87 (11.2)	83 (11.8)	1 (1.9)	7 (3.5)
	평균액		338	428	334	343	108	70
9분위	수혜자	5,462	68 (8.6)	0 (0.0)	68 (8.8)	67 (9.5)	1 (1.9)	4 (2.0)
	평균액		408	0	405	406	180	29
10분위	수혜자	8,347	48 (6.1)	0 (0.0)	48 (6.2)	47 (6.7)	0 (0.0)	1 (0.5)
	평균액		314	0	310	316	0	50

주: 1) 소득구간과 평균소득금액은 조사가구의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였고, 나머지는 단순 평균값임.
 2) '전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정부보조금 등을 모두 합한 공적이전소득 금액임.
 3) '맞춤형'은 2015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맞춤형급여의 합계금액임.
 4) '보육관련'은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급식지원, 학비지원의 합계금액임.
 5) '취약층'은 한부모수당, 장애(아)수당, 가정위탁금 등의 합계금액임.
 6) []는 전체 아동가구수 대비 비중값, ()는 해당 급여항목의 전체 수혜자수 대비 비중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차 웨이브), 저자 분석.

2018년 기준 아동가구에 대한 ‘전체 사회보장’ 급여는 전체 아동가구 1,270가구 중 55.7%인 707가구에 가구당 연평균 51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이 중 ‘아동부문’ 급여는 연평균 356만원 수준으로, 전체 아동가구의 55.0%에 해당하는 699가구에 지급되었다. 아동부문 급여 중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학비·급식비 지원을 합한 ‘보육관련’ 급여는 619가구(48.7%)에게 연평균 339만원, ‘아동수당’ 급여는 400가구(31.5%)에게 연평균 51만원, 한부모수당·장애(아)수당·가정위탁금 등을 합한 ‘취약층’ 급여는 41가구(3.2%)에게 연평균 174만원, 세금환급형인 자녀장려금은 177가구(13.9%)에게 연평균 65만원 가량 지급되었다. 이외 생계·주거·교육급여를 합한 ‘맞춤형’ 급여가 67가구(5.3%)에게 연평균 694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2018년에는 ‘맞춤형’ 급여 이외에 다른 공적이전소득에서 2017년 대비 가구당 연평균 수급금액이 모두 증가했는데, ‘보육 관련’ 급여는 2017년 333만원에서 2018년 356만원으로 22.6만원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이 가구당 51만원 수준으로 추가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위별로 전체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 4~7분위의 수혜가구 비중이 높고 평균 급여액은 소득 2~3분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맞춤형’ 급여는 수혜가구는 소득 2~4분위에서 높고, 평균 급여액은 2~3분위에서 높다. ‘아동부문’ 급여와 ‘보육 관련’ 급여, ‘아동수당’ 모두 소득 4~7분위에 수혜가구 비중이 높고, 평균 급여액은 소득 4~5분위에서 높다. ‘취약층’ 급여는 소득 2~3분위에 수혜가구가 집중되고, 평균 급여액은 2~3분위와 7분위에서 높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3~5분위에 수혜가구 비중이 높고, 평균 급여액은 3~4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84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표 2-20〉 아동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상세 수혜 현황: 2018년 기준, 소득분위별, 연평균 (단위: 가구, 만원, %)

		평균 소득	전체 사회보장	맞춤형	아동부문				
					보육관련	아동수당	취약층	자녀장려	
전체	수혜자	3,532	707 [55.7]	67 [5.3]	699 [55.0]	619 [48.7]	400 [31.5]	41 [3.2]	177 [13.9]
	평균액		516	694	356	339	51	174	65
1분위	수혜자	-1,387	14 (2.0)	4 (6.0)	13 (1.9)	13 (2.1)	6 (1.5)	1 (2.4)	4 (2.3)
	평균액		456	346	285	226	47	144	0
2분위	수혜자	974	40 (5.7)	21 (31.3)	39 (5.6)	35 (5.7)	10 (2.5)	10 (24.4)	13 (7.3)
	평균액		865	991	283	227	48	174	66
3분위	수혜자	1,310	72 (10.2)	18 (26.9)	70 (10.0)	52 (8.4)	23 (5.8)	12 (29.3)	34 (19.2)
	평균액		591	809	308	303	54	185	69
4분위	수혜자	2,147	113 (16.0)	14 (20.9)	112 (16.0)	100 (16.2)	64 (16.0)	8 (19.5)	43 (24.3)
	평균액		570	409	418	387	56	195	70
5분위	수혜자	2,373	101 (14.3)	6 (9.0)	100 (14.3)	81 (13.1)	58 (14.5)	5 (12.2)	42 (23.7)
	평균액		508	450	373	378	53	160	66
6분위	수혜자	2,664	98 (13.9)	2 (3.0)	97 (13.9)	86 (13.9)	66 (16.5)	3 (7.3)	16 (9.0)
	평균액		447	146	343	336	49	76	0
7분위	수혜자	3,264	96 (13.6)	2 (3.0)	96 (13.7)	86 (13.9)	60 (15.0)	1 (2.4)	15 (8.5)
	평균액		452	514	350	343	49	363	53
8분위	수혜자	4,154	76 (10.7)	0 (0.0)	76 (10.9)	71 (11.5)	50 (12.5)	0 (0.0)	7 (4.0)
	평균액		463	0	357	342	49	0	52
9분위	수혜자	5,277	56 (7.9)	0 (0.0)	55 (7.9)	55 (8.9)	39 (9.8)	0 (0.0)	2 (1.1)
	평균액		2	3	0	337	47	1	30
10분위	수혜자	9,911	41 (5.8)	0 (0.0)	41 (5.9)	40 (6.5)	24 (6.0)	1 (2.4)	1 (0.6)
	평균액		2	3	0	317	47	1	0

주: 1) 소득구간과 평균소득금액은 조사가구의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였고, 나머지는 단순 평균값임.
 2) '전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정부보조금 등을 모두 합한 공적이전소득 금액임.
 3) '맞춤형'은 2015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맞춤형급여의 합계금액임.
 4) '보육관련'은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급식지원, 학비지원의 합계금액임.
 5) '취약층'은 한부모수당, 장애(아)수당, 가정위탁금 등의 합계금액임.
 6) []는 전체 아동가구수 대비 비중값, ()는 해당 급여항목의 전체 수혜자수 대비 비중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차 웨이브), 저자 분석.

2) 아동부문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완화효과

복지패널의 조사가구수 감소와 가구추적조사의 특성, 출산율 하락 등에 따라 아동가구는 2015년 1,766가구에서 2018년 1,439가구로 감소했는데, 이 중 중위소득 50%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빈곤아동가구는 2015년 85.8가구에서 2017년 65.5가구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65.7가구로 다소 증가하였다. 아동가구수 감소와 빈곤아동가구 추이가 반영되어 아동가구 빈곤율은 2015년 4.86%에서 2016년 4.14%로 0.72%p 하락한 후 2017~2018년에 각각 4.20%와 4.56%로 전년대비 0.05%p와 0.36%p 상승하였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빈곤가구수는 감소했으나(69.3→65.5가구, -5.4%), 아동가구수 감소(1,672→1,561가구, -6.6%)가 더 크게 반영되며 빈곤율이 상승하였고, 2018년에는 아동가구수 감소(1,561→1,439가구, -7.8%)가 커지며 빈곤가구수가 증가(65.5→65.7가구, 0.2%)함에 따라 빈곤율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최근 2018년 기준 공적이전소득 부문별로 빈곤율 완화효과를 보면,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관련' 급여가 빈곤율을 1.0%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여기에 '자녀장려금(CTC)'은 0.05%p, 2018년 도입되어 9~12월 동안 4개월 지급된 '아동수당'은 0.09%p, 한부모 등 '취약계층'은 0.2%p, 아동가구에 지급된 맞춤형급여·EITC·공적연금 등 '전체 사회보장급여'는 1.1%p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부문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완화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보육 관련'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취약계층',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순서가 된다.

2015~2018년 중 '보육 관련' 빈곤율 완화효과는 2016년 17%p로 가장 컸고 이후 작아졌고, '자녀장려금'은 2015년 0.5%p에서 2018년 0.05%p로 작아졌고, 취약계층은 2017년 0.7%p로 예외적으로 높았던 시기를

제외하면 0.1~0.3%대이고, ‘전체 사회보장급여’는 2017년 0.9%p로 작아졌으나 나머지 연도에는 1.1%p로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2015~2018년 중 빈곤율 완화효과 감소는 주로 ‘보육 관련’ 급여와 ‘자녀장려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육 관련’ 급여의 빈곤 완화효과 감소는, 동 부문이 주로 만 7세 미만 유아동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해당 연령대의 아동수 감소효과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자녀장려금’은 세금환급의 특성상 시차가 1년 가량 발생해 2017~2018년 감소는 2016~2017년의 소득증가 효과로 보여진다.

〈표 2-21〉 아동가구의 빈곤 현황 및 공적이전소득별 빈곤완화 효과: 2015~2018년

(단위: 가구, %, %p)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동가구 1,766	빈곤율	아동가구 1,672	빈곤율	아동가구 1,561	빈곤율	아동가구 1,439	빈곤율
빈곤율	85.8	4.86	69.3	4.14	65.5	4.20	65.7	4.56
		(-)		(-0.71)		(0.05)		(0.36)
-보육	104.6	5.92	96.9	5.79	86.4	5.54	80.2	5.57
	[18.8]	[1.1]	[27.6]	[1.7]	[20.9]	[1.3]	[14.5]	[1.0]
-보육 CTC	112.7	6.38	100.5	6.01	88.0	5.64	80.9	5.62
	[8.1]	[0.5]	[3.6]	[0.2]	[1.6]	[0.10]	[0.7]	[0.05]
-보육 아동수당	-	-	-	-	-	-	82.2	5.71
	-	-	-	-	-	-	[1.3]	[0.09]
-보육 아동수당 CTC	-	-	-	-	-	-	82.9	5.76
	-	-	-	-	-	-	[0.7]	[0.05]
-보육 아동수당 CTC, 취약	117.6	6.66	102.6	6.13	98.7	6.32	85.3	5.93
	[4.9]	[0.3]	[2.1]	[0.1]	[10.7]	[0.7]	[2.4]	[0.2]
-전체 사회 보장급여	137.8	7.80	121.5	7.27	112.2	7.19	101.2	7.03
	[20.3]	[1.1]	[18.9]	[1.1]	[13.5]	[0.9]	[15.9]	[1.1]

주: 1) 가구수와 빈곤율은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빈곤율은 중위소득 50%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3) ()는 전년대비 증감분값임.

4) []는 이전 단계의 빈곤가구 및 빈곤율 대비 증감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14차 웨이브), 저자 분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주요국 제도운영 사례

제1절 개관

제2절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제 3 장 주요국 제도운영 사례

제1절 개관

OECD 국가들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2017년 기준 GDP대비 평균 2.34%로, 현금(cash) 비중이 1.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services) 0.95%, 조세경감(tax breaks) 0.23% 순이다. 유럽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2.57%인데, 현금 비중은 1.35%로 0.19%p 높고, 서비스 비중은 0.93%로 OECD 평균 대비 0.02%p 낮은 반면 조세경감은 0.29%로 OECD 평균 대비 0.06%p 높다. 2017년 우리나라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은 1.3%(18년 기준 1.4%)로 OECD·유럽의 평균지출 수준의 절반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터키·멕시코·미국 등 3개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유형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중 서비스의 GDP 대비 비중은 0.95%로 OECD 평균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고, 조세 비중은 0.20%로 OECD 평균의 88%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현금 비중은 0.15%(18년 기준 0.20%²⁶⁾)로 OECD 평균의 1/8을 다소 상회하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족부문 현금 비중은 유럽 평균의 1/9 수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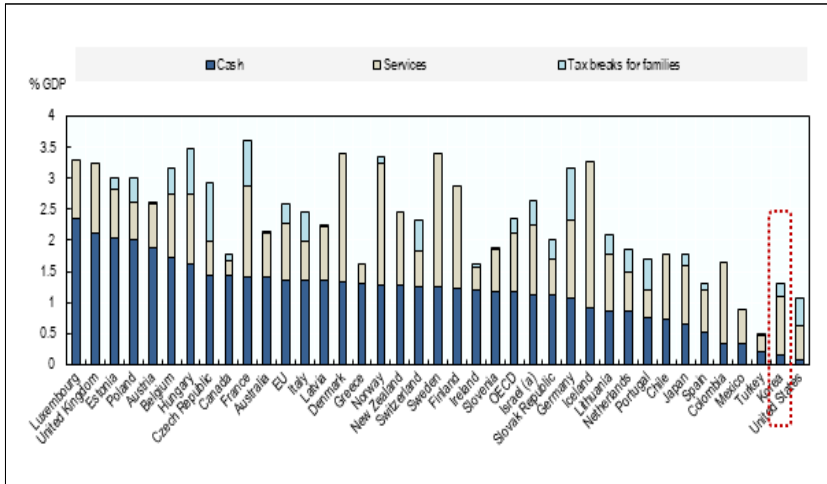
2017년 기준 OECD 37개 회원국의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상위 34위이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및

26) 2019년부터 소득제한을 없애고 보편적 급여로 전환된 것을 감안하면, 아동부문 현금 유형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은 대략 0.2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경감 비중은 각각 상위 15위와 16위로 중간 순위 이상에 있으나, 현금 비중은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36위에 있다.

[그림 3-1] OECD 국가들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 추이: GDP대비, 2015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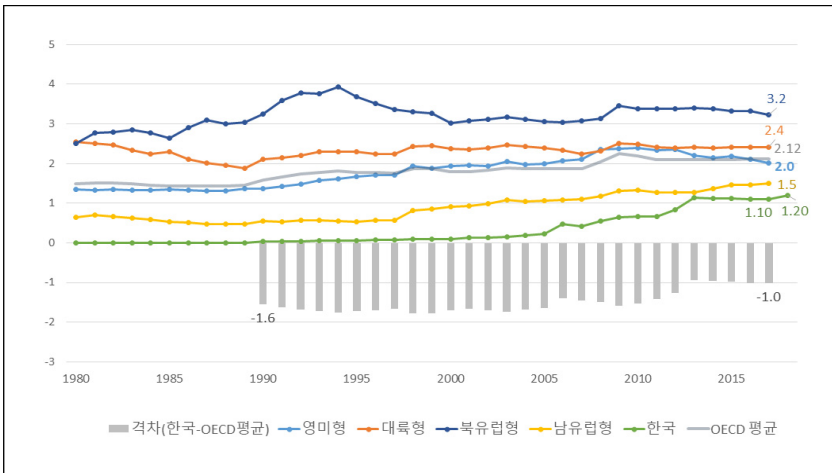
주: 1) 가족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사회재정지출 비중으로, 조세경감의 일본 자료는 2015년 자료값이고, 영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반영되지 않아 과소집계 되었음.
 자료: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4.12. 인출

복지국가 유형별 GDP대비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은 북유럽형과 대륙형 국가에서 높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영미형과 남유럽형의 순서이다²⁷⁾. 북유럽형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은 1990년대 중반 4%에 근접해 높아졌으나 이후 하락해 2009년 이후에는 3%대로 2017년 3.2%를 기록하였다. 대륙형은 1980년대 하락세를 보이며 1%대 후반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9년 이후 2%대 중반으로 2017년 2.4%를

27) (영미형)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미국, (대륙형)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형)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남유럽형)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기록하였다. 영미형은 1980년 1%대에서 2008년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최근 2017년 2.0%를 기록하였다. 남유럽형은 국가군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는데, 1980년대 0.5% 내외로 유지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며 2017년 1.5%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0.0%에서 상승세를 지속하며 2017년 1.2%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격차는 1990년 1.6%p에서 2017년 1.0%p로 축소되었다.

[그림 3-2]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 비교: OECD 평균 vs. 복지국가 유형별 vs. 한국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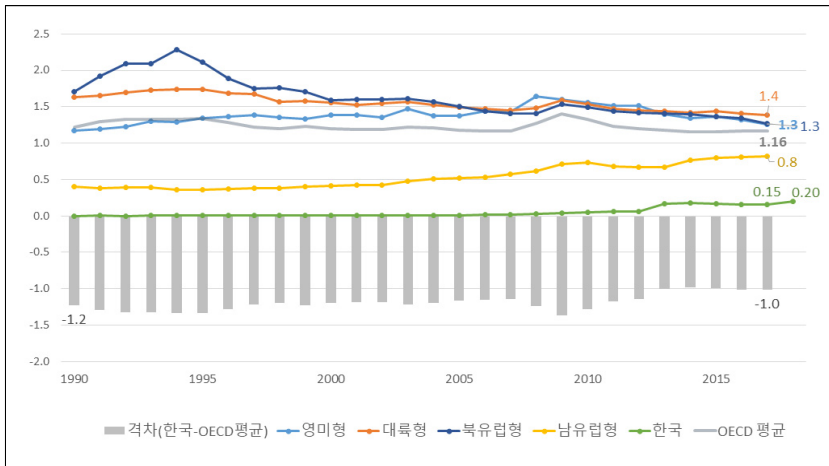
주: (영미형)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미국 (대륙형)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형)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남유럽형)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자료: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4.12. 인출

92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OECD 회원국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을 보면, 북유럽형은 1990년대 중반 2%를 상회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이후 하락하여 최근 2017년 1.3%이고, 대륙형은 1990년대 1.7%에서 하락해 2017년 1.4%에 있다. 영미형은 2008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이후 하락해 2017년 1.3%이고, 남유럽형은 1990년대 0.4%대에서 상승세를 지속해 와 2017년 0.8%에 있다. 우리나라와의 OECD 평균과의 격차는 1990년 1.2%p에서 2017년 1.0%p로 소폭 축소되었다.

[그림 3-3]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 비교: 현금유형 기준

(단위: %)



주: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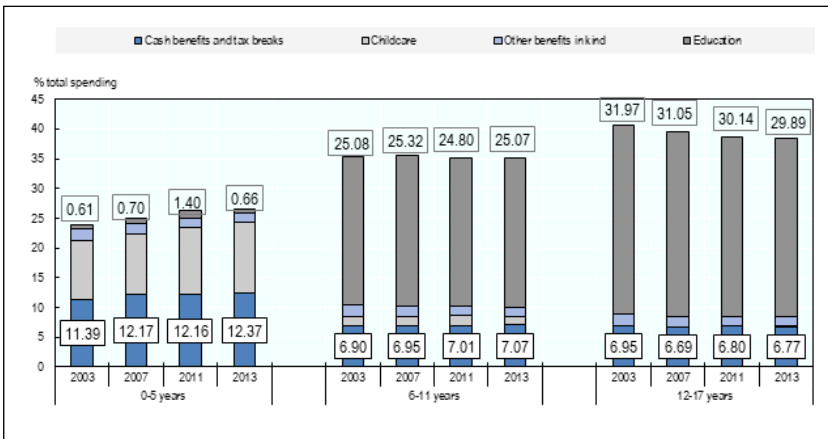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Extracts 2021. 4. 12. 접속

가족부문 및 초·중·고등 교육에 대한 공공재정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 기준으로 아동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출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 0~5세 아동의 지출 비중은 23~26%대로, 2003년 23.8%에서 상승세를 지속해 2013년 26.47%이다. 만 6~11세 아동의 지출 비중은 35%대로, 2003년 35.4%에서 2013년 35.2%로 다소 낮아졌다. 만 12~17세 아동의 지출비중은 38~40%대로, 2003년 40.8%에서 2013년 38.4%로 낮아졌다.

지출유형별로 보면 만 0~5세 아동은 현금급여와 조세경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 비중이 높았고,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 비중은 작아지고 교육재정의 비중이 높아졌다. 현금 및 조세경감의 지출 비중은 만 0~5세 미만 아동은 11~12%대, 6~11세 아동은 6% 후반~7% 초반, 12~17세 아동은 6% 후반대이다. 반면에 교육지출 비중은 만 0~5세는 0% 후반~1%대, 6~11세 24~25%대, 12~17세 30%대이다.

[그림 3-4] 가족 및 교육 공공재정지출 비중: 아동 연령별, 2003~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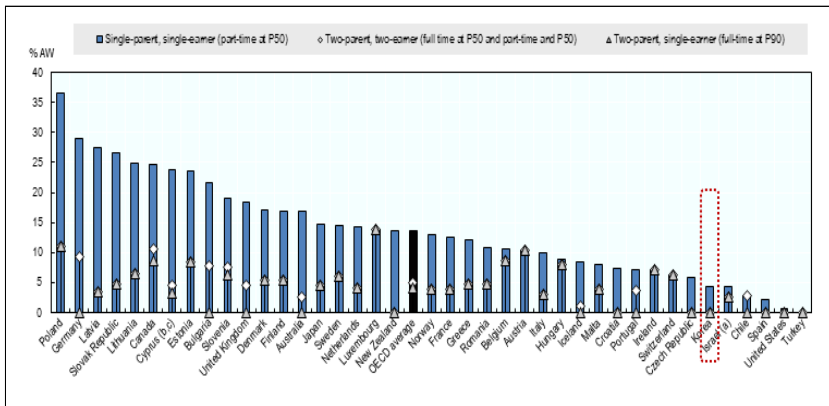
주: 가족 및 초·중·고등 교육 부문 공공재정지출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한 비중값임.

자료: OECD, StatExtracts 2021. 4. 12. 접속

공공재정지출을 가족형태와 수입원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OECD 평균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전일제 평균수입(AW)의 13.7%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 지원은 4.4%로, 이스라엘·칠레·스페인·미국·터키 등 5개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아 OECD 35개 회원국 중 30위에 있다. 폴란드가 3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독일(29.0%), 라트비아(27.4%) 등 대륙형 국가들에서 높은 편이다.

홀벌이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OECD 평균 기준으로 전일제 평균 수입의 4.2%이고, 맞벌이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5.0%로 홀벌이 부모 가정에 비해 다소 높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양 가구에 대한 지원수준이 동일한데, 독일과 영국·포르투갈·칠레·호주·캐나다·슬로베니아·아일랜드의 7개국에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다. 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스위스·칠레·터키의 6개국은 가족형태나 수입원별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림 3-5]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교: 현금 유형, 가족형태 및 수입원별, 2018년 기준 (단위: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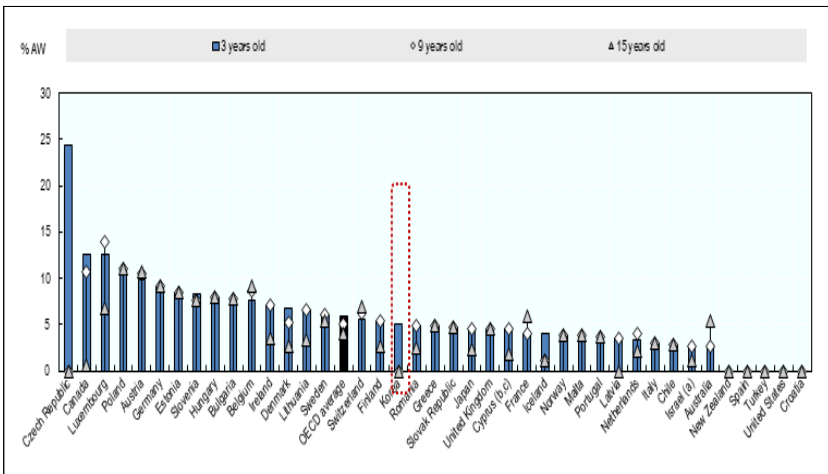
주: 만 9~12세의 2명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전일제(시간제)'는 주40(20시간)시간을, P50(90)은 전일제 임금분위의 50(90)퍼센타일을 의미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4.12. 인출.

맞벌이 2아동 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로 지원 현황을 보면, OECD 평균 만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공공재정지출은 전일제 평균수입(AW)의 5.9%이고, 9세 이하 아동은 5.0%, 15세 이하 아동은 4.0%로, 아동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원규모는 작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만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만 5.1%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동 연령대에 대한 지원은 OECD 35개 회원국 중 17위 수준이다.

35개 OECD 국가 중 독일·그리스·영국·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미국 등 15개국은 연령별 차등이 없고, 스웨덴·일본·핀란드·덴마크·캐나다 등 15개 국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원규모가 작아지고, 호주·프랑스·벨기에·스위스·오스트리아의 5개국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원규모가 커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3-6]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 비교: 현금 유형, 막내아동 연령 기준, 2018년 기준 (단위: %AW)



주: 맞벌이 2아동 부모가정(전일제+시간제)로 전일제 소득분포의 중위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4.1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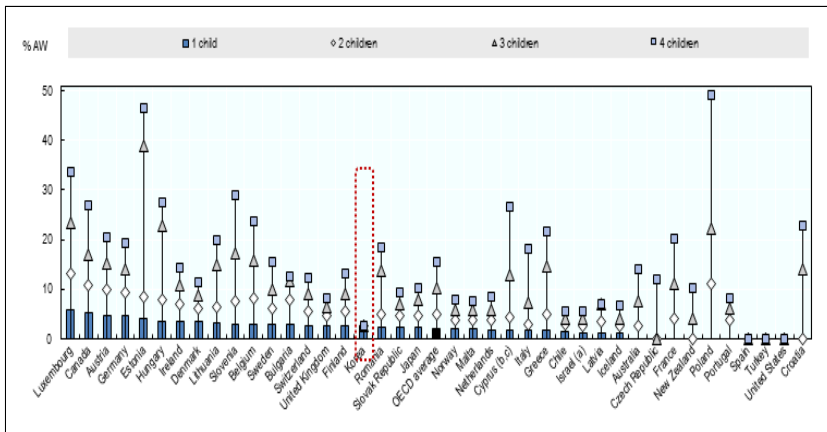
가구내 아동수 기준 공공재정지출을 보면, OECD 평균 아동 1명은 전일제 평균수입의 2.1%, 2명은 5.0%, 3명은 10.1%, 4명은 15.4%로 점증하는 구조이다. 아동1명당 평균 지원액을 보면, 아동 1명 가구는 2.1%, 아동 2명은 2.5%, 아동 3명은 3.3%, 아동 4명은 3.8% 이다. 아동 1명 가구 대비 아동 2~4명 가구의 지원액은 각각 2.4배, 4.8배, 7.3배가 된다.

우리나라는 가구의 아동수에 관계없이 2.5% 수준으로 동일한데, 아동 1명 가구 기준 OECD 35개 회원국 중 16위에 있다. 2아동 가구 기준으로 OECD의 29위, 3아동 가구 기준으로 31위, 4아동 가구 기준으로 32위로, 스페인과 터키,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폴란드와 프랑스·호주·노르웨이의 4개국은 2아동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뉴질랜드는 3아동 이상, 체코는 4아동 이상 아동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아동 3명과 4명에 대해 차등하고 있지 않다.

[그림 3-7]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교: 현금 유형, 가구내 아동수별, 2018년 기준

(단위: %AW)



주: 맞벌이 2아동 부모가구(전일제+시간제)로 막내아동 연령이 6세이면서 전일제 소득분포의 중위 수준 가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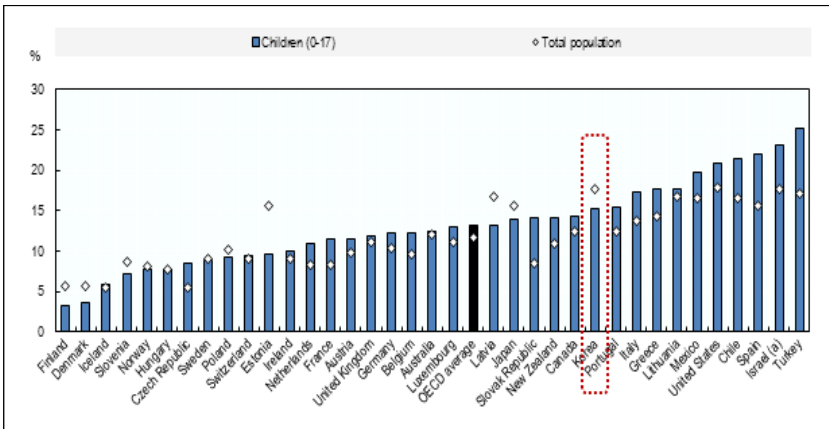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4.12. 인출.

OECD의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2016년 기준 15.2%로 상위 27위로 높은 수준이다. 핀란드·덴마크의 아동빈곤율이 5% 미만으로 가장 낮고, 미국·칠레·스페인·이스라엘·터키 등이 20%를 상회하여 높은 국가군이다.

대체로 아동빈곤율이 전체 인구의 빈곤율 보다 높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일본·슬로베니아·헝가리·폴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의 11개국은 아동빈곤율이 낮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빈곤율은 17.6%로 아동빈곤율 15.2% 대비 2.4%p 높고, OECD 국가들 중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하고 높아 35위에 있다.

[그림 3-8] OECD 국가들의 빈곤율 현황: 전체 vs. 아동, 2016년/최신년도 기준

(단위: %)



주: 1) 빈곤율은 균등화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를 기준선(base line)으로 함.
 2) 뉴질랜드는 2014년, 아이슬란드·일본·스위스·터키는 2015년, 칠레는 2017년 값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4.12. 인출.

OECD 평균 아동 빈곤율은 2006년 11.9%에서 2011년 12.5%로 높아졌고 이후 하락해 2016년 12.0%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는 시기인 2006~2011년 중 자료가 집계된 국가 22개국 중 슬로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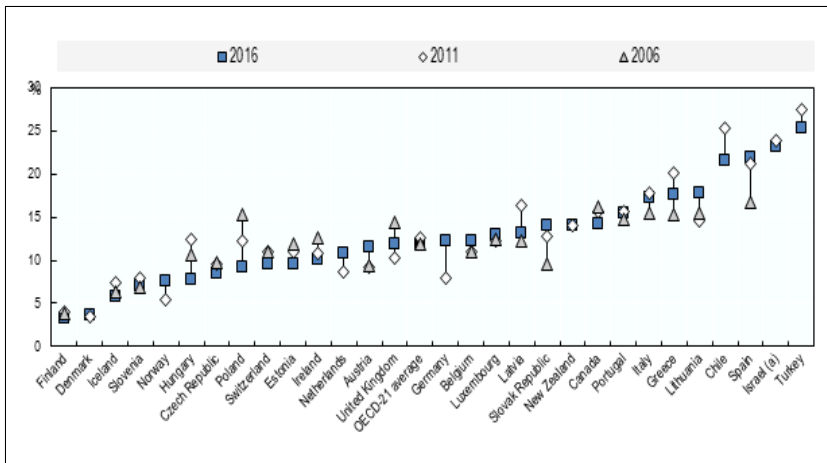
아·오스트리아·라트비아·슬로베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과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이탈리아 등 재정위험국을 포함해 12개국에서 아동 빈곤율이 상승했고, 핀란드·노르웨이·캐나다와 헝가리·체코·폴란드·에스토니아 등 동유럽국가를 포함해 10개국에서는 하락하였다²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기인 2011~2016년에는 총 30개 국가 중 독일·노르웨이·네덜란드·오트리아·영국·리투아니아·스페인 등 12개 국가에서 아동빈곤율이 상승하였고, 핀란드·헝가리·폴란드·라트비아·캐나다 등 18개 국가에서는 하락하였다.

2006~2016년 중 핀란드·아이슬란드·헝가리·체코·폴란드·스위스·에스토니아·아일랜드·캐나다 등 9개국의 아동빈곤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그림 3-9] OECD 국가들의 아동 빈곤율 추이: 2006년 vs. 2011년 vs. 201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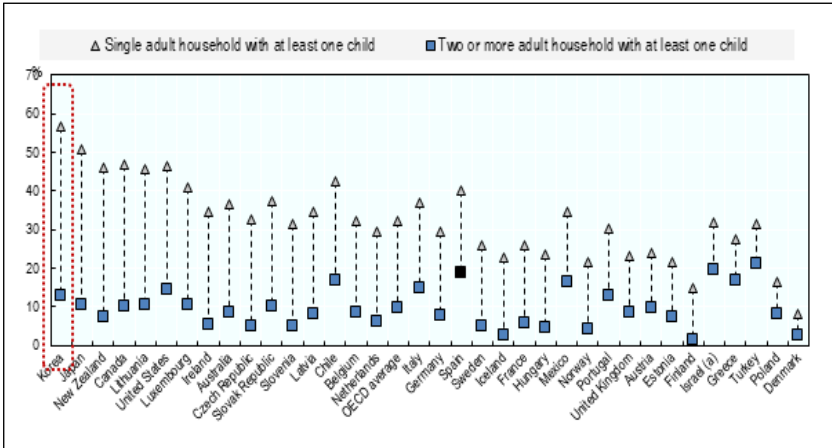
주: 상승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4.12. 인출.

28) 우리나라는 기간 중 아동빈곤율 측정방식이 달라져 OECD 공식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6년 OECD 평균 한부모가구 아동빈곤율은 32.5%로, 전체 근로가구의 아동빈곤율 11.6% 대비 20.9%p 높고, 2인 이상 성인가구의 9.8% 대비 22.7%p 높다. OECD의 36개국 중 우리나라는 한부모가구의 아동빈곤율과 2인 이상 성인가구 혹은 전체 근로가구의 아동빈곤율과의 격차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구 아동빈곤율은 56.6%로, 전체 근로가구 14.0% 대비 42.6%p 높고, 2인 이상 성인가구 12.9% 대비 43.7%p 높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구 아동빈곤율은 OECD평균 대비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가구유형별 아동빈곤율 격차는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과 뉴질랜드·캐나다 등에서 높고, 덴마크·폴란드·터키·그리스 등에서는 빈곤율의 격차가 10%p 내외로 작다.

[그림 3-10] OECD 국가들의 아동 빈곤율: 한부모가구 vs. 전체 근로가구 등, 2016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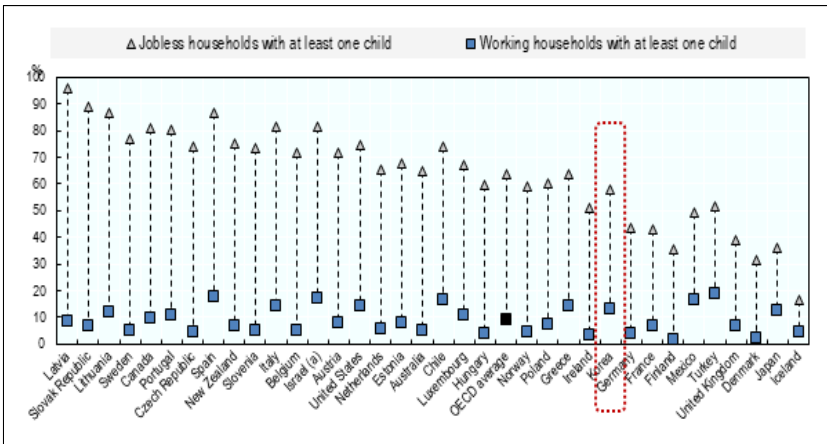


주: 상동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4.12. 인출.

2016년 OECD 평균 실직가구 아동빈곤율은 63.9%로, 전체 근로가구의 아동빈곤율 11.6% 대비 52.3%p 높고, 2인 이상 성인가구의 8.9% 대비 55.0%p 높다. OECD의 36개국 중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실직가구의 아동빈곤율은 57.8%로, 2인 이상 성인가구나 전체 근로가구의 아동빈곤율 대비 43~44%p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실직가구 아동빈곤율을 OECD 평균 대비 6.2%p 낮아, OECD 36개국 중 27위에 있다. 라트비아·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의 동유럽국가와 스웨덴·캐나다·포르투갈·스페인 등의 국가들에서 실직가구 아동빈곤율이 높고, 근로가구나 2인 이상 성인 가구 대비 격차가 크다.

[그림 3-11] OECD 국가들의 아동 빈곤율: 실직가구 vs. 전체 근로가구 등, 2016년 기준 (단위: %)



주: 상동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4.12. 인출.

제2절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제도는 대체로 1950년대에 도입이 완료되어, 제도 운영의 역사가 긴 제도이다. 에스토니아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헝가리·네덜란드에서 1920~30년대에 도입되었고,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국가와 영국·캐나다 등 영미형 국가들에서 1940~50년대에 도입되었다.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2018년부터 도입하였고, 미국·멕시코·호주·뉴질랜드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표 3-1〉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도입 연도

제도 도입	해당 국가
20~30년대	('22) 에스토니아 ('32) 프랑스 ('37) 이탈리아 ('38) 스페인, 헝가리 ('39)네덜란드
40년대	('42) 포르투갈 ('45) 영국, 캐나다, 슬로바키아 ('46) 노르웨이 ('47) 스웨덴, 폴란드, 룩셈부르크 ('48) 핀란드, 오스트리아 ('49) 슬로베니아
50년대	('52) 스위스, 덴마크 ('54) 독일 ('58) 그리스
70년대	('72) 일본
90~10년대	('90)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18) 한국

자료: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http://www.missoc.org/INFOR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2021. 4.15. 인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은 대체로 만 17세까지로 하는 국가들이 많고, 25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호주·라트비아를 제외하면 총 23개국에서 만 15세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만 18세, 프랑스는 만 19세로 아동수당의 대상연령이 가장 높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지나더라도 대학 진학 등 교육을 받거나 일정 근로시간 이하로 취업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장애, 가구내 아동수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해 아동수당을 20대의 청년기(youth)까지 연장·적용하고 있다.

〈표 3-2〉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대상 연령

아동 연령	해당 국가
~6세	· 한국
~14세	· 라트비아(1세 초과부터) *18세(장애)/20세(전일 학생), 일본(중등 졸업식까지)
~15세	· 영국 *18세(부분 학생)/20세(전일 학생), 아일랜드 *18세, 스위스 *20세(미취업), 포르투갈 *24세(학생), 네덜란드
~16세	· 슬로바키아 *18세(만성질환)/25세(전일 학생, 장애), 에스토니아 *19세, 스웨덴, 핀란드
~17세	· 독일 *미취업·전일 학생 등 연장, 장애는 연령제한 없음, 폴란드 *21세(전일 고등)/24세(전일 대학), 룩셈부르크 *25세(학생, 장애), 이탈리아 *21세(아동3명이상이며 전일 학생), 헝가리 23세(학생), 오스트리아 *24세(학생, 장애),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덴마크, 캐나다, 스페인
~18세	· 리투아니아 *21세(학생, 훈련)
~19세	· 프랑스 *21세(3자녀이상)

자료: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http://www.missoc.org/INFOR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2021.

아동수당 지급방식은 보편주의에 기반하는 국가수가 많으나, 순수하게 보편주의 방식을 취하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등 5개국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책목표에 따라 차등방식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차등방식의 기준은 출산순위, 아동연령, 아동수 등이 되는데, 출산지원이나 연령대별 혹은 가구내 아동수별 경제적 부담의 상이함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외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가구의 소득제한을 두는 선별방식도 영국·스페인 등 6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3-3〉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적용 방식

제도 방식		해당 국가
보편		· 노르웨이,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한국
보편 & 차등	출산 증액	·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독일(출산순위, 증액)
	연령 감액	· 덴마크(연령 감액, 소득연계) · 영국(부모 중 일정소득 초과 시 과세, 둘째부터 감액) · 일본, 캐나다, 리투아니아(연령/소득, 감액), · 포르투갈(월령/자산/소득, 감액)
	연령 증액	· 네덜란드(연령 증액) · 룩셈부르크(연령/아동수, 증액)
	아동수 증액	· 프랑스, 슬로베니아(아동수/소득, 증액) · 헝가리(아동수, 증액) · 라트비아(아동수 4명 이상 증액)
선별 & 차등	· 스페인(아동수별 차등 소득상한) · 폴란드(소득 선별/연령 증액, 둘째부터 보충수당 추가) · 오스트리아(연령/아동수, 증액) · 이탈리아(소득/가족원수 차등, 급여자에 한함) · 호주(소득상한, 차등)	

자료: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http://www.missoc.org/INFOR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2021. 4.15. 인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은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benefits)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가족수당에는 아동수당 외에도 정책 목적을 세분화한 다양한 소득지원 제도가 포함된다.

〈표 3-4〉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외 관련 제도

아동 연령	해당 국가
노르웨이	· 한부모가족 추가수당(3~5년간, 소득 선별, 아동수별 감액)
프랑스	· 자녀간병수당(20세 미만 아동) · 가족보충수당(3세 초과~21세 미만 3명 이상 자녀, 소득 선별), · 주거수당/이사수당(소득 선별, 복학급여(6~18세),
스위스	· 직업훈련급여(하생 및 25세 미만 신청자), 주거급여(저소득, 18세 미만)
룩셈부르크	· 입학수당(6~18세, 학생 등 25세), 최저소득보장(아동 1인당 추가)
영국	· 소득급여(16세~연금크레딧 자격자, 임신/5살 미만 아동/질병·장애 근로불능)
독일	· 최저소득급여(가족구성에 따라 차등, 5세 이하 아동수 따라 점증)
스페인	· 한부모가구의 입양, 대가족, 장애모가구 등 특별급여(소득선별)
슬로바키아	· 부모수당(3살까지, 만성질환시 6살), 일회급여(월최저생활비의 3배)
슬로베니아	· 다자녀수당(3명 아동 이상, 18세 미만(학생 26세)) · 부모소득지원(18세 미만 아동 돌봄을 위해 퇴직 혹은 감직)
에스토니아	· 한부모 아동급여, 다자녀가족수당(3자녀 이상), 부모수당(보험된 소득기반)
폴란드	· 간병수당(자립생활 불가, 16세 미만 장애아가구, 소득 선별)과 간병급여 (16세 미만 장애아 간병으로 근로불가, 보편) 간 선택 · 부양급여(둘째부터, 18세 미만, 장애아나 동거시 25세)
헝가리	· 아동보호지원(만 18세 미만, 전일 학생은 23세 소득 선별)
라트비아	· 위탁가정수당

주: 아동 요건을 갖는 제도로 출산 및 보육 관련 급여는 제외함..

자료: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http://www.missoc.org/INFOR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202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종합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종합

제2절 정책 시사점

제4장 종합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종합

본 연구는 가계의 미시자료 분석과 국제 사례연구로 구성된다. 미시자료 분석은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측면과 소득(수입)측면으로 구분하였고, 국제 사례연구는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과 아동수당제도 운영사례로 하였다.

아동가구의 소비는 무자녀가구와 비교하여 소비구조 및 경제여건의 변화시 소비행태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가구조사의 대표성을 갖고 상세한 소비지출 품목이 상세하게 조사되는 가계동향조사로 하였고, 분석기간은 2015~2019년으로 하였다. 이 중 2015~2017년은 경기확장기에 해당되고, 2017~2019년은 경기 수축기에 해당된다. 분석결과, 아동가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무자녀가구에 비해 소비지출 금액이 크고 교육비 지출에 상당히 집중된 구조로, 상대적으로 경기 확장기에 소비증가가 크고 수축기에 소비감소가 작은 등 소비증가의 경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영영유아가가구 보다 학령기 가구에서 보다 뚜렷하였고, 경제여건이 후퇴하는 시기에도 교육비 지출은 확대하며 대신에 오락·문화, 교통, 의류·신발, 통신 등 다른 품목의 소비 지출을 줄이는 특징을 보였다.

2015~2019년 중 아동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금액은 300만원대로 100만원 후반~200만원 초반의 무자녀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아동 가구 중에서도 2세대2아동의 유아가구 소비지출은 200만원 후반~300만원 중반대인 반면, 학령기가구는 300만원 중·후반대로 보다 높았다. 소비 품목별 비중은 아동가구는 교육(14.9%), 음식·숙박(13.2%) 등의

순서로, 식료품·비주류음료(14.9%), 음식·숙박(13.9%), 교육(3.8%) 등이 높은 무자녀가구에 비해 교육비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교육비 비중은 영유아가가구 보다 학령기가구에서 높았다.

2015~2019년 중 소비지출 추이는 경기 확장기인 2015~2017년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경기 수축기인 2017~2019년에는 뚜렷하게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경기확장기인 2015~2017년 중 2016년에 무자녀 가구는 소비 감소세를 보인 반면 아동가구는 미미한 수준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해 소비 경향이 보다 큰 것을 보였다. 아동가구 중에서도 2세대2아동의 영유아가가구는 2.2%, 학령기가구는 3.7%로, 아동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비증가율이 보다 컸다. 소비 품목별로 세분화하면, 동 시기 영유아가가구와 학령기가구는 교육, 음식·숙박, 주류·담배,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증가율이 컸고, 무자녀가구는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등의 증가율이 컸다. 아동가구 중 저소득층인 1~4분위에서도 교육 증가율은 높았고, 대신 오락·문화, 보건, 교통,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소비 감소폭이 컸다.

경기 수축기인 2017~2019년 중 2019년의 전년대비 소비증가율을 보면, 아동가구는 -3.0%로 무자녀가구 -5.7%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 감소폭이 작은데, 특히 2세대2아동의 영유아가가구는 -2.0%, 학령기가구는 -2.1로 보다 작았다. 이는 경기 수축기에 아동가구, 특히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조정(즉, 감소)의 여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 시기 영유아가가구와 학령기가구 모두 교육,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주류·담배 등의 증가율은 유지된 반면, 교통, 통신, 의류·신발,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감소폭이 컸다. 특히, 아동가구 중 소득 1~4분위에서도 교육지출은 높은 증가율이 유지되는 반면, 교통,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의류·신발 등의 감소폭이 컸다.

아동가구의 소득은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2015~2018년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유형은 경제여건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1차소득과 사적·공적이전소득 및 비소비지출이 반영되는 가처분소득, 가구원에 따른 가구비용을 조정한 균등화가처분소득 등으로 구분하였다. 아동가구는 1차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무자녀가구 대비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나,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이나 조세 등 비소비지출과 가구원 부양에 따른 소득감소효과가 반영되는 균등화가처분소득의 경우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무자녀가구 대비 1.5배 가량 높은 수준이 된다. 2015~2018년 중 아동가구는 1차소득 기준 6천만원 후반~7천만원대인데, 가처분소득은 보다 작아져 이전소득의 소득증가효과 보다 사회보장 부담금 및 조세 등 비소비지출의 소득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가구원수로 조정한 균등화가처분소득은 소득감소효과가 크게 반영되어 3천만원 중·후반대로 낮아진다. 반면에 무자녀가구의 경우 1차소득은 3~4천만원 수준이나, 이전소득효과가 비소비지출효과 보다 커서 가처분소득은 상승하고, 균등화가처분소득은 감소효과가 크지 않아 2~3천만원 대로 나타난다.

소득분포는 1차소득의 경우 아동가구는 중·고소득층인 5분위 이상에 집중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비소비지출 등의 감소효과가 커지며 균등화가처분소득으로는 4~7분위에 집중된 구조가 된다. 반면에 무자녀가구의 소득분포는 저소득층인 1~3분위에 집중되고, 가처분소득 및 균등화가처분소득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소득분포의 특징이 반영되며 아동가구 빈곤율(가구수 기준)은 2015~2018년 중 소득유형별로 4~7%로, 무자녀가구의 30~40%대 대비 낮았다. 다만, 가구원 부양비용에 따라 균등화소득의 빈곤율은 아동가구에서 2.4~3.5%p 높아진 반면, 무자녀가구는 3.8~ 7.8%p 가량 하락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아동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의 효과가 아동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상쇄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2015~2018년 중 아동부문에 대한 공적이전을 보면, 영유아 아동에 수혜가 집중되는 보육관련 이전소득이 가장 큰데, 보육관련 급여가 대체로 소득계층에 무관한 보편주의 방식임에 따라 영유아 아동수가 많은 소득 4~7분위에 집중된 특징을 보인다. 이외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이전과 조세환급형으로 주어지는 자녀장려금이 있으나, 취약계층 지원은 대상이 적고 지원금액도 보육관련 급여 대비 작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 성격에 따라 소득 3~6분위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양육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보다 클 수 있는 한부모가구는 2015~2018년 중 아동가구 내 4~5% 분포하였는데, 한부모가구 중 빈곤가구는 빈곤한 아동가구의 15~22%를 차지하여 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5~2018년 소득추이를 보면, 아동가구의 소득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무자녀가구에 비해 경기 수축기에는 무자녀가구 대비 소득감소도 큰 반면, 경기확장기에는 소득증가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여건의 변화가 1년여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소득의 특성으로 인해, 가구소득은 2016년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인 후 2017~2018년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전체가구의 소득은 전년대비 0.4~0.6%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아동가구는 소득유형별로 전년대비 7~9%대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무자녀가구는 6~7% 증가하였다. 이는 경기 수축기의 소득 감소의 영향이 아동가구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2018년 전체가구의 소득은 전년대비 3%대에서 증가했는데 아동가구는 4~5%대에서 증가한 반면, 무자녀가구는 0.8~0.9%대에서 증가하였다. 이는 경기 확장기의 소득 증가의 영향 역시 아동가구에서 보다 크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빈곤율은 2017년까지 하락

세를 보인 후에 2018년에 다소 상승했는데, 2018년에는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미진해서 빈곤 기준선 아래의 가구수가 많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동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수급금액이 큰 순서대로 보육관련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취약계층 지원, 아동수당, 자녀장려금의 순서로 나타난다. 특히 연평균 300만원 이상의 보육관련 지원으로 소득이 감소세였던 2016년 빈곤율 개선효과가 높아졌고('15년 1.1%p→'16년 1.7%p), 소득이 증가세를 보인 2017~2018년은 빈곤율 개선효과가 낮아졌다('16년 1.7%p→'17년 1.3%p→'18년 1.0%p). 아동수당은 2018년 9~12월의 4개월간 매월 1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에 따른 빈곤율 개선효과는 0.09%p 정도로 나타난다.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매월 지급되어 수급요건을 갖추면 연간 최대 120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어, 아동수당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2017년 기준 1.3%로 OECD 37개 회원국 중 34위이다. OECD의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은 2017년 평균 2.34%로 우리나라 대비 1.8배 가량 높다. 유형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동부문에 대한 서비스나 조세경감은 OECD 국가들 중 중간 순위 정도 되는데, 특히 현금 비중은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OECD 평균 현금 비중은 1.16%로 유형 중 가장 높는데, 우리나라는 0.15%로 비중이 가장 낮다. 아동 연령대별로 보면, OECD 평균 기준으로 0~6세 아동은 현금 및 조세경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 비중이 높은 반면, 6~11세에서 12~17세로 갈수록 현금 및 조세경감의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교육 비중이 높아지며 전체 공공재정지출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들은 대체로 가구내 아동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액이 커지고, 한부모가구와 같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크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2016년 기준 15.2%로 OECD 37개 회원국 중 27위에 있다. OECD 국가들의 아동빈곤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상승한 후 2016년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부모가구 아동빈곤율이나 실직가구 아동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금급여 중 대표적인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1960년대 이전에 도입되어진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제도로, 대체로 만 15~1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수당의 법정 지급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학업이나 단시간 취업,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등은 예외적인 경우로 하여 21~25세의 청년에 대해 국가별로 다양하게 연장되고 있다. 또한, 보편주의 방식에 기본이 되기는 하나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출산율 제고와 아동연령이나 가구내 아동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차등하는 선별방식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2절 정책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는 아동가구는 1) 교육비를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다른 소비지출의 제약이 있고, 2) 아동양육에 따른 비용발생에 따라 소득감소효과가 상당하고 경제여건에 보다 민감한데, 이에 대한 공적이전효과는 크지 않고, 3) 아동부문 공적이전 중 영유아 아동에 집중되는 보육 관련 비중이 가장 크고, 4) 아동부문 공적이전의 빈곤율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의 빈곤율이 높고, 5)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족부문 지원은 지원대상 연령이 제한적이고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아동양육에 필요한 소득지원을 다층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현금급여제도 중 대표적인 아동수당의 경우 우리나라는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에 한하여 매월 10만원(연간 최대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아동수당이 7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운영되는 국가들이 거의 없고,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교육비를 중심으로 해서 학령기로 갈수록 커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아동수당의 연령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양육의 부담이 보다 가중되는 한부모가구나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양육환경을 감안하여 이들 가구들이 빈곤가구가 되지 않고 아동 복지가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지원의 정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여건이 후퇴하는 경우 아동가구의 소비지출 경향은 높은 반면, 다른 가구집단에 비해 소득감소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아동수당법」 상 매월 10만원의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실직가구에 대한 지원을 아동 수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겠다.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isticsList>, 2021. 3. 8. 인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2015-2019년).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 2021.4.20. 인출
- 통계청 복지통계과(2018. 5.30.)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 에서 3. 12.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11-14차 웨이브).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2021.4.20. 인출.
- 통계청(2020), 2020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 통계청(2021), 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김수정, 정익중. (2017)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69(3), p. 9~33.
- Hirsch, D. (2008) Estimating the costs of child poverty, York: JRF.
- Holzer, J., Schanzenbach, W., Duncan, J., and Ludwig, J. (2008) The economic costs of childhood poverty in United States, Journal of Children and Poverty, 14(1). p. 41~61.
-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http://www.missoc.org/INFOR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2021. 4.15. 인출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4.12. 인출>

Pearce J. (2011). An estimate of national costs of child poverty in
New Zealand, <http://www.analytica.org.nz/Publications/>에서
2020.12.01. 인출

Wada, I., and Igararchi, A. (2014). The social costs of child abuse in
Japa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46, p. 72~77.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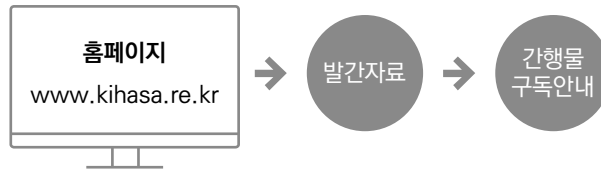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